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16

# 1980년대 개헌운동과 6.10민주항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16

# 1980년대 개헌운동과 6.10민주항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연구책임자    최 종 숙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민주화운동 연구과제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부 다를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16

# 1980년대 개헌운동과 6.10민주항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6.10민주항쟁은 군부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하나의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만들어낸 첫 출발점이다. 갓난아이가 자라서 30세의 성인이 될 정도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6.10민주항쟁은 여전히 현재적이다. 여전히 현재를 규정하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형태는 대체로 6.10민주항쟁에서 그 형태를 빚지고 있다. 동시에 6.10민주항쟁은 오늘날 민주주의 퇴보의 마지막 노선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6.10민주항쟁을 지속적으로 불러내고 탐구하고 재해석해야 한다.

6.10민주항쟁은 한국의 현재적 민주주의의 기원이 되는 대사건인 만큼 상당한 분량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사회운동으로서 6.10민주항쟁의 핵심 슬로건인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이 바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사회운동론 특히 ‘개헌’프레임에 주목하여 6.10민주항쟁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도 기존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6.10민주항쟁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개헌’프레임을 6.10민주항쟁의 마스터 프레임이었다고 전제하고 개헌프레임의 등장부터 6.10민주항쟁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주목해 보았다. 1985년 2.12 총선에서 처음 등장한 ‘직선제 개헌’ 프레임은 그것을 제기했던 신생 야당 신민당을 일약 제1야당으로 급부상시킨다. 이후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세력 역시 개헌프레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개헌 프레임은 단순한 선거공약으로 남지 않고 이후 ‘개헌’운동을 생성시킴으로써 6.10민주항쟁에 이르는 저항주기(cycle of protest)의 ‘마스터 프레임’(master frame)으로 기여한다.

사실 개헌프레임이 야당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회운동세력들은 이 프레임의 중요성은 인정하되 그것을 지나치게 온건한 것으로 보고 보다 급진적인 프레임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일반대중으로부터 소외된 자초한 1986년 5월 3일 ‘인천대회’에서의 패배를 전환점으로 사회운동세력 내에서는 개헌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온건화 움직임이 대세로 자리잡게 된다. 그 결실이 바로 야당과 사회운동세력이 협력하여 결성한 6.10민주항쟁의 지도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다.

이처럼 개헌프레임에 주목함으로써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6월항쟁을 포함한 개헌운동의 한 주체로서 야당의 중요성과 이중적 역할이다. 사실 그동안 사회운동연구에서 야당의 역할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당은 제도권 정당으로서 정치사회의 행위자로서만 다뤄지거나 사회운동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6월항쟁 기간 내내 저항의 급진화를 염려하는 ‘기회주의자’ 내지는 6.29선언 이후 본격화된 개헌국면에서 개헌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한 협상세력으로 주로 다뤄졌다. 물론 야당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동시에 야당은 개헌운동의 한 주체였다. 야당은 6월항쟁의 마스터 프레임인 개헌프레임을 처음으로 제기했으며 그것을

---

끝까지 일관되게 주창한 세력이기도 하다. 또한 야당은 제도권내에 개혁을 의제화하는 동시에 때때로 국회밖으로 나와 개혁운동에 가담하는 운동주체세력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했다.

둘째, 마스터 프레임으로서 개혁프레임은 자체적인 대규모 대중동원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개혁은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시민사회의 여론주도세력인 신중간계층의 온건한 개혁주의와 잘 조응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개혁프레임이 야당에 의해 제기되기는 했으나 대중 그 스스로에 의해 '선택'된 프레임이기도 했음을 의미한다. 사회운동세력의 개혁프레임의 급진화시도가 실패한 것 역시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 정도를 염원하고 있었던 대다수 시민들의 정서와 괴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개혁논의 역시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할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6월항쟁에서 사회운동세력의 조직가(organizer)로서의 역할이다. 사실 6월항쟁의 마스터 프레임인 개혁프레임을 야당이 제기했고 개혁프레임 그 자체가 대중동원의 상당부분을 책임졌다면 6월항쟁에서 사회운동세력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세력은 여전히 6월항쟁 발생에 필수적인 요소였는데 이들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던 저항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해내는 조직가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이 부재하거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6월항쟁은 발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단적으로 1987년 4.13 호헌조치 이후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단식행렬이 이어지는 수준에서 그쳤다면 국본은 결성되지 못하고 6월항쟁 역시 발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운동세력이 6.10민주항쟁 발생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거나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대신에 제한된 역할이기는 하나 필수적인 역할을 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6.10민주항쟁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운동 프레임으로서 개혁프레임을 조망할 때 6.10민주항쟁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그 위상에 대해 보다 더 입체적이며 상대적인 이해가 가능해진다.

# 목 차

## 제1장

### 문제의 제기

- 13 1. 6.10민주항쟁 30주년에 즈음하여
- 13 2. 연구의 목적
- 14 3. 6.10민주항쟁을 다룬 기존 연구들

## 제2장

###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 19 1. 사회운동론의 이론적 전개: 구조주의 대 구성주의의 갈등과 종합의 시도
- 20 2. 사회운동론의 개념들
  - 20 1) 프레임과 마스터 프레임
  - 22 2) 정치적 기회구조
  - 23 3) 동원조직과 중위동원자
  - 23 4) 저항주기와 대중동원기 및 소강기
- 24 3. 분석틀의 구성

## 제3장

### 1980년대 전반기, 정치사회와 시민 사회의 상황

- 29 1980년대 전반기,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상황

## 제4장

### 1980년대 개헌운동의 전개

- 35 1. 1985년 2.12총선과 ‘개헌’프레임의 등장
- 38 2. 사회운동세력의 이념적 급진화와 5.3인천대회에서의 패배
- 38 1) 1차 소강기: 사회운동세력의 이념적 급진화
- 40 2) 1차 대중동원기: 신민당의 원외투쟁과 5.3인천대회에서의 패배
- 43 3. 사회운동세력의 이념적 온건화와 1987년 6.10민주항쟁의 성공
- 43 1) 2차 소강기: 사회운동세력의 이념적 온건화
- 47 2) 2차 대중동원기: 4.13호헌조치와 시국선언정국
- 52 3) 2차 대중동원기III: 국본의 결성과 6.10민주항쟁

## 제5장

### 1980년대 개헌 운동의 저항주기와 각 세력별 입장의 변화과정

- 57 1. 각 세력별 개헌프레임의 변화
- 57 1) 야당(민추협-신민당-민주당)의 입장: 직선제 개헌론 고수
- 58 2) 정부와 여당의 입장: 호헌론에서 개헌론으로, 다시 호헌론으로
- 58 3) 사회운동세력의 입장: ‘민주헌법제정론’에서 ‘직선제 수용’으로
- 59 4) 신중간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입장: 개헌론 지지
- 60 2. 개헌운동의 저항주기
- 60 1) 1차 소강기: 1985년 2월~1986년 1월
- 60 2) 1차 대중동원기: 1986년 1월~1986년 5월
- 61 3) 2차 소강기: 1986년 5월~1987년 4월
- 62 4) 2차 대중동원기: 1987년 4월~1987년 6월
- 62 5) 소결



제6장

6.10민주항쟁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

67 6.10민주항쟁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

---

제7장

결론

73 결론

---

참고문헌

76



## 표목차

- 37 <표 4-1> 1985년 2.12 12대 총선결과
  - 41 <표 4-2> 1986년 개헌서명운동, 시국선언 발표, 개헌현판식집회
  - 48 <표 4-3> 1987년 4.13 호헌조치 이후 시국성명서 발표 단체(개인포함)
  - 50 <표 4-4> 1987년 4.13 호헌조치 이후 단식농성 벌인 단체(개인포함)
  - 53 <표 4-5>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지역·부문 조직결성과정(~1987.6)
  - 63 <표 5-1> 시기별 각 세력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과 저항주기
- 

## 그림목차

- 25 <그림 2-1> 마스터 프레임의 등장에 따른 저항주기의 전개





# 문제의 제기





# 제1장

# 문제의 제기

## 1 ■ 6.10민주항쟁 30주년에 즈음하여

6.10민주항쟁이 발생한지도 어언 29년이 흘렀다. 내년이면 벌써 30주년이다. 6.10민주항쟁 이후 30여년 동안 이 항쟁의 성과물인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 여섯번이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하나의 가족세대가 교체될 만큼의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우리가 6.10민주항쟁을 기억하고 논쟁의 장으로 불러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10민주항쟁은 군부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하나의 되돌릴 수 없는 대세로 만들어낸 첫 출발점이다. 동시에 '87년체제'라는 말이 있듯 30여년전의 6.10민주항쟁은 30여년 후인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규정한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형태는 대체로 6.10민주항쟁에서 그 형태를 빚지고 있다. 보통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경로의존성'이라는 말도 있다. 처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과정들이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6.10민주항쟁은 오늘날 민주주의 퇴보의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에서 6.10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있다. 그나마도 6.10민주항쟁에 대한 관심이 예년만 같지 못하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6.10민주항쟁은 단순히 '기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전히 현재를 규정하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6.10민주항쟁을 지속적으로 불러내고 탐구하고 재해석해야 한다.

## 2 ■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6.10민주항쟁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개헌'프레임을 6.10민주항쟁의 마스터 프레임이었다고 전제하고 개헌프레임의 등장부터 6.10민주항쟁에 이르게 되는 1980년대

개헌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6.10민주항쟁에서 가장 많이 올려퍼진 슬로건은 단연 ‘호헌철폐, 독재타도’였다. 6.10민주항쟁을 성공한 정치투쟁으로 만든 ‘6.29선언’의 핵심 항목 역시 ‘직선제개헌의 수용’이었다. 그 말은 6.10민주항쟁은 민주화이행을 야기했던 민주항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개헌’을 목표로 한 ‘개헌’운동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개헌운동으로서 6.10민주항쟁을 다룬 논의가 거의 없다는 점은 흥미롭다.

1985년 2.12 총선에서 처음 등장한 개헌프레임은 그것을 제기했던 신생 야당 신민당을 일약 제1야당으로 급부상시킨다. 이후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세력 역시 개헌프레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개헌프레임은 단순히 선거공약으로 남지 않고 개헌운동을 촉발시킨 사회운동 프레임이 되며 6.10민주항쟁으로 정점에 이르는 저항주기(cycle of protest)의 ‘마스터 프레임’(master frame)으로 기여한다.

사실 개헌프레임이 야당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당시의 사회운동세력들은 이 프레임의 중요성은 인정하되 그것을 지나치게 온건한 것으로 보고 보다 급진적인 프레임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념적 급진화로 인해 일반대중으로부터 소외를 자초한 1986년 5월 3일 ‘인천대회’에서의 패배를 전환점으로 사회운동세력 내에서는 개헌프레임을 수용하는 온건화 전략이 대세로 자리잡게 된다. 그 결실이 1987년 5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로의 결집으로 이어졌고 ‘민주헌법쟁취’를 모토로 한 국민운동본부는 6.10민주항쟁의 지도부로 기여할 수 있었다.

이처럼 1980년대 개헌운동과 그 정점으로서 6.10민주항쟁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개헌프레임 자체가 갖고 있었던 높은 대중적 지지를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갖는 함의를 좀더 깊이있게 숙고할 수 있다. 또한 개헌프레임의 주창자로서 야당의 역할을 좀더 균형있게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6.10민주항쟁 발생에 사회운동조직들이 기여를 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6.10민주항쟁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그 위상에 대해 보다 더 입체적이며 상대적인 이해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 6.10민주항쟁을 다룬 기존 연구들

6.10민주항쟁이 발생한지 30여년이 흘렀고 6.10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만큼 6.10민주항쟁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민주화이행론이 압도적이었다. 6.10민주항쟁은 독재체제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 체제전환을 야기한 사건이기 때문에 6.10민주항쟁이 어떻게 민주화이행으로 이어졌는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표적으로 정치학자 임혁백(1990)은 전략적 선택이론을 통해 지배세력 내의 온건파와 시민사회 내의 온건파간의 협약에 의해 민주화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6.10민주항쟁에 대해 이루어진 초기 학술연구로서 임혁백의 연구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비판도 받았다. 주된 비판의 포커스는 과연 6.10민주항쟁 국면에서 지배세력이 강온파로 분열되었는가 하는 지점이었다. 전두환의 증언에서도 드러나듯(김성익 1992) 전두환과 노태우

(와 민정당) 사이에 사실상 유의미한 분열은 없었다는 것이 이후 논의의 대체적인 평가였다(김호기 1994; 이갑윤·문용직 1995; 윤상철 1997; 손호철 2003).

한편, 사회학자 성경룡(1995)은 민주화이행이 엘리트간의 협약에 의한 것이기 이전에 저항하는 대중의 요구를 지배세력이 받아들여도록 '강제'한 결과였음을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룡의 민주화이행론은 아래로부터의 대중동원에 의한 이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배세력의 양보를 강제한 거대한 대중저항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파헤치기 위해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6.10민주항쟁을 분석한 연구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6.10민주항쟁이 발생하게 된 정치적 기회구조를 분석한 연구(조대엽 1999; 윤성이 1999; 최현·김지영 2007; 김용철 2015), 6.10 민주항쟁을 이끌어간 대중동원의 주체로서 사회운동조직(정철희 1996; 황인성 1997; 정대화 2005), 야당(이계희 1992; 유은정 1993; 심지연 2006) 혹은 민주협(강원택 외 2015)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졌다.

이처럼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6.10민주항쟁을 조망한 연구들은 민주화이행론에 치우쳐 있던 6.10민주항쟁연구를 좀더 풍부하게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대중동원의 한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6.10민주항쟁 발생에 영향을 미친 복합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다. 예를 들어 조대엽(1999)의 연구는 6.10민주항쟁을 촉발시킨 정치적 구조와 계기들을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대중동원을 가능케한(혹은 소멸케한) 정치적 구조와 계기 중심으로 분석하다보니 구조의 변화에 의해 사회운동이 자동적으로 발생 혹은 소멸하는 것처럼 비춰져 구조결정론의 혐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편 6.10민주항쟁의 주체에 대한 연구들은 6.10민주항쟁 발생에 기여한 주체들의 역할과 노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주체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된 맥락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자칫 주관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 대표적으로 정철희(1996)의 연구는 6.10민주항쟁을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로 '중위동원자'라는 개념으로 포착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6.10민주항쟁 발생맥락에서 국민운동본부로 결집된 사회운동조직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구조적 맥락에 대한 논의가 균형있게 서술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주체의 노력만으로 사회운동이 촉발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6.10민주항쟁은 주체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의 상호융합과정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보다 균형잡힌 시각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대중동원의 한 요소로서 사회운동의 슬로건이나 상징과 같은 프레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당시에 벌어졌던 다양한 이념논쟁을 정리한 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예컨대 일송정 편집부 1988; 박선웅 1998) 그러한 이념이 사회운동 프레임으로 취해짐으로써 대중동원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6.10민주항쟁의 주된 슬로건이 '호헌철폐 독재타도'였다는 점에서 대체로 '개헌'슬로건이 비중있게 다뤄지나(정해구 2009; 서중석 2011) 개헌프레임 그 자체가 어떻게 등장했고 사회운동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최현·김지영 2007). '헌법개정'에 대해 다룬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대체로 규범적 관점에서 헌법내용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박명림

2005; 서경석 2009; 성낙인 2013; 서희경 2014).

본 연구는 사회운동론 특히 ‘개헌’ 프레임에 주목하여 6.10민주항쟁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도 기존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운동 프레임으로서 개헌프레임을 조망할 때 6.10민주항쟁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그 위상에 대해 보다 더 입체적이며 상대적인 이해가 가능해 질 것이다.



##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 제2장

#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 1 ■ 사회운동론의 이론적 전개: 구조주의 대 구성주의의 갈등과 종합의 시도

본 연구는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사회운동론의 여러 개념들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사회운동의 고전적 이론들은 사회운동발생을 비이성적인 불만의 표현이나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사회문화연구소, 1993: 2장). 이러한 고전적 이론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자원동원론은 사회운동을 제도적인 정치과정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행위로 파악하고 감정이나 불만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과 자원에 초점을 맞추었다(McCarthy and Zald 1977).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원동원론은 1970년대 사회운동 연구의 르네상스를 이루어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운동을 비이성적이라 본 고전적 관점을 비판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사회운동 발생에서 감정이나 불만의 역할을 배제했다는 점(Snow at al. 1986), 또한 사회운동 발생의 원인을 조직이나 자원 등 지나치게 운동 내부적 변수로만 본다는 점(Kitschelt 1986, 59; Meyer 1993, 36)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자원동원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정치과정론은 자원동원론이 놓쳤던, 사회운동 외부에서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구조적 요인을 정치적 기회구조(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ies)라는 개념으로 포착하였다. 또한 자원동원론이 간과했던 불만과 같은 인지적(cognitive) 요소를 놓치지 않으면서 자원동원론의 주요 공헌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이 동원되는 조직적 맥락에 대한 고려도 포괄하고자 했다(McAdam 1982, 52). 이러한 기여를 통해 1980년대 이후 정치과정론은 사회운동론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올라서게 된다.

그런데 정치과정론은 지나친 구조주의적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이유는 정치과정론에 토대하고 있는 사회운동 연구들이 주로 사회운동을 발생시키는 '정치적 기회구조'를 발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Kitschelt 1986; Meyer 1993; Tarrow 1994; van Dyke 2003; Koopmans 2004). 따라서 굿윈과 재스퍼는 정치과정론이 사회운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요소들을 운동 행위자의 외부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것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강화해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Goodwin and Jasper 2004, 4).

이러한 구조적 접근의 지배 속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래로 이른바 '구성주의자'들에 의해 '주관적 의식'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Snow at al. 1986; Klandermans 1988). 자원동원론이나

정치과정론에서 강조하듯 사회운동 발생에서 구조, 자원, 조직 등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운동 발생에 유리한 기회구조가 만들어지고 자원이 넘쳐나고 탄탄한 조직이 갖춰져도 그러한 구조적 요소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주관적 차원'의 중요성이 구조적 접근의 지배 속에서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한 요인이 되었다고도 하겠다. 특히 스노우와 동료들은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체계로서 프레임(frame)이라는 개념을 제시했고 이후 이 개념은 사회운동에서 주관적 인식을 강조하는 흐름의 핵심개념으로 부상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 정치과정론이 강조하는 정치적 기회구조, 자원동원론이 강조하는 조직,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프레임 개념을 결합시키려는 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연구가 맥아담·맥카시·잘드의 연구다(McAdam·McCarthy·Zald 1996). 실제 현실에서 사회운동이 발생하려면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조성되어야 하며 그것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식'이 필요하고 그러한 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동원조직이 존재해야 한다. 다만 정치과정론자들로서 이들은 위 세 변수 가운데 정치적 기회구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조직/의식'이라는 세 요소를 결합시키고자 했던 이들의 시도를 따르되 주관적 인식의 한 요소로서 '프레임' 개념, 특히 마스터 프레임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 2 ■ 사회운동론의 개념들

### 1) 프레임과 마스터 프레임

프레임(frame)이란 고프만의 개념으로, '개인들이 그들의 삶의 장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규정하도록 하는 해석체계(schemata of interpretation)'를 의미한다(Goffman 1974, 21). 스노우와 동료들은 이러한 고프만의 개념을 사회운동에 적용하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사회운동의 프레임이란 특정의 사회운동 혹은 사회운동 참여자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그것에 대한 논리, 해석체계라고 할 수 있다(Snow et al. 1986, 464). 말하자면 단순히 개인의 불행으로 사고되었던 것들을 사회적 조건의 부당함으로 따라서 사회에 대한 요구로 단순화하여 재정의해 내고 강조하는 인식적 도구와 같은 것이다.

사회운동 프레임은 진단과 처방, 동기화의 성격을 갖는다(Snow and Benford 1988). 진단적 특징이란 어떤 상황이 어떤 원인 때문에 도래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저항의 대상을 명시하고 저항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처방적 특징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의미하며 동기화의 특징은 직접적으로 사회운동 참여를 촉발시키려는 동기부여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회운동의 프레임을 개개인의 해석체계와 연계시킴으로써 그들의 인지적 해방을 돕고 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대한 지지 혹은 참여자로 변모시

키고자 하는 실천행위를 프레임 정렬(frame alignment)이라고 할 수 있다(Snow et al. 1986).

이러한 프레임 정렬은 다시 네 가지 형태로 정교화되고 있는데 바로 프레임 다리놓기(frame bridging), 프레임 증폭(frame amplification), 프레임 확장(frame extension), 프레임 변형(frame transformation)이 그것이다(Snow et al. 1986, 467-475). 프레임 다리놓기란 이데올로기적으로 수렴되지만 구조적으로 관련없는 프레임들 간의 연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독재민주화를 위해 개헌이슈와 노동이슈를 연결시킨다거나 여성이슈를 연결시키는 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 프레임 증폭은 사회운동에 대한 지지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된 일상적 가치나 믿음에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레임 확장은 관련된 다른 이슈를 포괄할 수 있도록 일차적 프레임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며(ex: 군비지출 증가와 복지비지출의 삭감을 연결) 프레임 변형은 기존 프레임이 수명이 다했거나 다른 일반가치들과 잘 연계되지 않거나 처해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애초의 프레임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말한다.

프레임들 가운데 특정 사회운동 전체를 지배하는 프레임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마스터 프레임(master frame)이라고 한다(Snow and Benford 1992, 143-150). 마스터 프레임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하고 정교화한 스노우와 벤포드에 따르면 마스터 프레임은 하나의 저항주기를 촉발시키는 프레임이며 그 저항주기의 시작과 끝을 규정짓는 프레임이다. 마스터 프레임 역시 보통의 프레임과 마찬가지로 진단, 처방, 동기화적 특징을 보유했으며 프레임 다리놓기, 증폭, 확장, 변형 등의 과정을 갖는다. 그러나 그 규모는 훨씬 크며 그 영향력은 전체 사회운동과 그 참여세력에 미친다. 마스터 프레임이 등장할 때에야 비로소 대규모 대중동원이 가능하게 된다.

마스터 프레임이 그 저항주기에 포괄되는 모든 참여자들의 프레임에 관여할 수는 없을지라도 마스터 프레임의 논리로부터 이탈한 세력은 대중들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 스노우와 벤포드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때의 '이탈세력'에는 지배집단도 포함된다. 그 이유는 마스터 프레임은 광범위한 대중들과의 프레임 정렬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므로 그러한 프레임으로부터 이탈한다는 것은 지배집단에게도 치명적이다. 따라서 지배집단 역시 마스터 프레임을 거부할 경우 광범위한 대중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스노우와 벤포드는 마스터 프레임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슬로건형 마스터 프레임(restricted master frame)이고 다른 하나는 이데올로기형 마스터 프레임(elaborate master frame)이다(Snow and Benford 1992, 139-140).<sup>1</sup> 슬로건형 마스터 프레임은 '증폭이나 확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배타적인 관념의 형태'다. 반면 이데올로기형 마스터 프레임은 '해석의 여지가 크고 의미증폭, 확장을 허용하는 포용적 형태'다. 이 둘 가운데 본 연구에 좀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슬로건형 마스터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의 대표적인 사례는 1980년대 미국의 평화운동의 부활을 이끈 '핵동결(freeze)' 슬로건이다. 이 간명한 슬로건은 당시 새로 집권한 레이건 행정부의 서구유럽에 핵무기를 배치

1 이 두 마스터 프레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제한적 마스터 프레임'과 '상술적 마스터 프레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그것이 갖는 내용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각각 '슬로건형'과 '이데올로기형'으로 번역했음을 밝혀둔다.

하겠다는 나토계획에 맞서 핵위협의 심각성을 단 하나의 구호로 집약시키는 역할을 했다(Ibid. 143). 슬로건형 마스터 프레임은 교착상태를 타개해 나가고 대중들과의 프레임 정렬에 이르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80년대 중반 한국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 등장한 ‘개헌’ 프레임 역시 단일한 슬로건형태로서 1960년대 이래로 전개되어온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성공으로 이끌 ‘열쇠’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슬로건형 마스터 프레임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정치적 기회구조

마스터 프레임에는 그것의 등장에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있다(Diani 1996; Stanbridge 2002). 맥아담은 정치적 기회구조를 네 요소로 정리하고 있다(McAdam 1996, 27-28). 첫번째 요소는 제도화된 정치체제의 상대적인 개방성/폐쇄성이며 두번째 요소는 엘리트 지형(alignment)의 상대적인 안정성/불안정성이고 세번째 요소는 사회운동이 활용할 수 있는 엘리트 동맹세력의 존재/부재이다. 마지막으로 맥아담은 국가의 억압성향을 포함시키고 있다. 맥아담의 정리는 당시까지의 연구자들이 주로 활용해 왔던 요소들을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들에서 자주 활용되어 왔다(Koopmans and Olzak 2004; 홍일표 2006; 최현·김지영 2007).

그러나 맥아담의 목록이 늘 동일하게 다른 연구들에서 받아들여지고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Meyer and Minkoff 2004; Koopmans 2004). 본 연구 역시 맥아담의 요소들 가운데에서 세 가지 즉, 제도화된 정치체제의 상대적인 개방성/폐쇄성, 엘리트 동맹세력의 존재/부재, 그리고 국가의 억압성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대통령직선제나 내각제와 같은 개헌쟁점은 최고 통수권자를 선출하는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연관되지만 기본적으로 의회를 포함한 정치체 내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권력경쟁 규칙이다(윤상철 1997, 135).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정치사회(의회)가 필요하며 정치사회에서 그것을 다룰 주체로서 제도권 내의 자율적인 정당들이 필요하다(제도화된 정치체제의 상대적인 개방성). 이때 제도권 내의 선명야당은 국회밖에서 개헌운동을 펼치는 사회운동세력의 제도권내 엘리트 동맹세력으로 기여할 수 있다.

국가의 억압은 사회운동에게는 기회의 확장, 개방이라기보다 기회의 축소, 폐쇄에 해당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기회구조를 다분히 ‘창문의 은유’와 마찬가지로 ‘기회구조’가 열릴 때 사회운동도 더 활성화된다고 일방향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인 국가의 억압이 강화되는 시점에 대중동원이 발생하는 경우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조대엽 1999; Goodwin and Jasper 2004). 이와 관련하여 사회운동 촉진의 ‘가능성’으로서의 ‘기회’뿐만 아니라 억압과 비용으로서의 ‘위협’(threat) 역시 사회운동을 발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인 골드스톤과 톨리의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Goldstone and Tilly 2001, 182-3).

특히 본 연구가 ‘국가의 억압’으로서 주목하는 바는 물리적 억압보다는 국가의 프레임링을 통한 억압이다.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마스터 프레임이 등장한 이후 국가 역시 그 영향권 하에 놓이게 된다. 그것의

의미는 국가 역시 마스터 프레임의 논리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는 기존의 마스터 프레임을 변형시키거나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마스터 프레임을 거부할 경우 그것은 마스터 프레임을 지지하는 대중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전두환정권이 ‘개헌’이라는 마스터 프레임에 반하는 ‘호헌론’을 제기할 때마다 광범위한 대중저항에 놓이게 된 것도 이러한 논리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3) 동원조직과 중위동원자

한편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도래하고 마스터 프레임이 생성되었지만 그것을 활용할 동원조직이 부재하다면 사회운동은 성공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동원조직은 미시동원조직과 중위동원조직이라는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McAdam·McCarthy·Zald 1996). 미시동원이 운동집단 내부 또는 외부의 ‘개인’을 동원하는 것이라면(McAdam 1988; 정철희 1995), 중위동원이란 운동 ‘단체’들을 연결하고 동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Gerhards and Rucht 1992; 정철희 1996). 사회운동의 기원은 소집단에서 발원하지만 그것이 전국적 수준으로 발전해 가려면 소집단들간의 연결망 즉 중위동원조직이 필요하다(정철희 1996, 69). 마스터 프레임과 6.10민주항쟁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주로 중위동원조직들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 4) 저항주기와 대중동원기 및 소강기

끝으로 살펴볼 개념은 태로우의 ‘저항주기(cycle of protest)’이다. 태로우에게 저항주기란 갈등의 심화, 대중동원의 증가와 빠른 확산, 빠른 혁신, 집합행위 프레임의 등장과 변형, 조직적 혹은 비조직적 참여의 결합, 도전자와 지배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협상, 저항의 종결로서 개혁, 탄압, 혹은 혁명 등을 모두 포괄한다(Tarrow 1994, 153). 이때 태로우는 저항 주기와 한번의 대중동원의 고저를 연결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대중동원이 점차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고 쇠퇴하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주기로 사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다른 연구자들은 하나의 저항주기가 단 한번의 대중동원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대중동원기와 그것들을 연결하는 소강기(abeyance)로 구성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Taylor 1989; Mooney and Hunt 1996). 상승 중에 있던 대중동원이 쇠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비우호적인 정치환경이 도래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회운동조직의 전략이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운동의 목표가 달성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대중동원이 쇠퇴한 이후 도래하는 소강기 동안 사회운동조직들은 앞선 운동을 성찰하고 그것이 실패하게 된 이유를 재점검 하며 기존의 프레임, 전략을 수정, 보완해 나가게 된다. 소강기 동안 사회운동조직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에 도래할 대중동원기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대중동원과 목표달성에 성공할 수도 있지만 대중동원에는 성공했지만

목표달성에는 실패하여 또 한번의 소강기로 이어지거나 대중동원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저항주기가 종결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소강기 동안 사회운동조직들의 준비상태는 이후에 도래할 동원기를 준비하고 그것의 성패에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3 ■ 분석틀의 구성

이상의 이론적 자원들을 종합해 보면, 특정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마스터 프레임이 형성되면 저항의 주기가 촉발되게 된다. 저항의 주기는 ‘동원기-소강기-동원기-소강기-동원기...’의 형태로 전개된다. 하나의 저항주기에서 동원기와 소강기는 지배엘리트와 저항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치적 기회들의 개방/폐쇄로 발생하게 된다. 모든 동원기의 대중동원 수준은 동일하지 않다. 저항세력이 정치적 기회/위협과 마스터 프레임의 활용, 그에 따른 운동전략, 전술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대중동원에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저항주기의 소멸은 정치적 기회구조가 변화되어 더 이상 마스터 프레임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저항의 목표로서 마스터 프레임이 달성되었을 때 혹은 새로운 마스터 프레임의 등장과 프레임 경쟁으로 인해 저항의 목표가 변경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또한 뒤 따른 소강기에서의 사회운동조직의 준비가 미비할 때 동원기가 아닌 소강기의 지속 즉 저항주기의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 <그림 2-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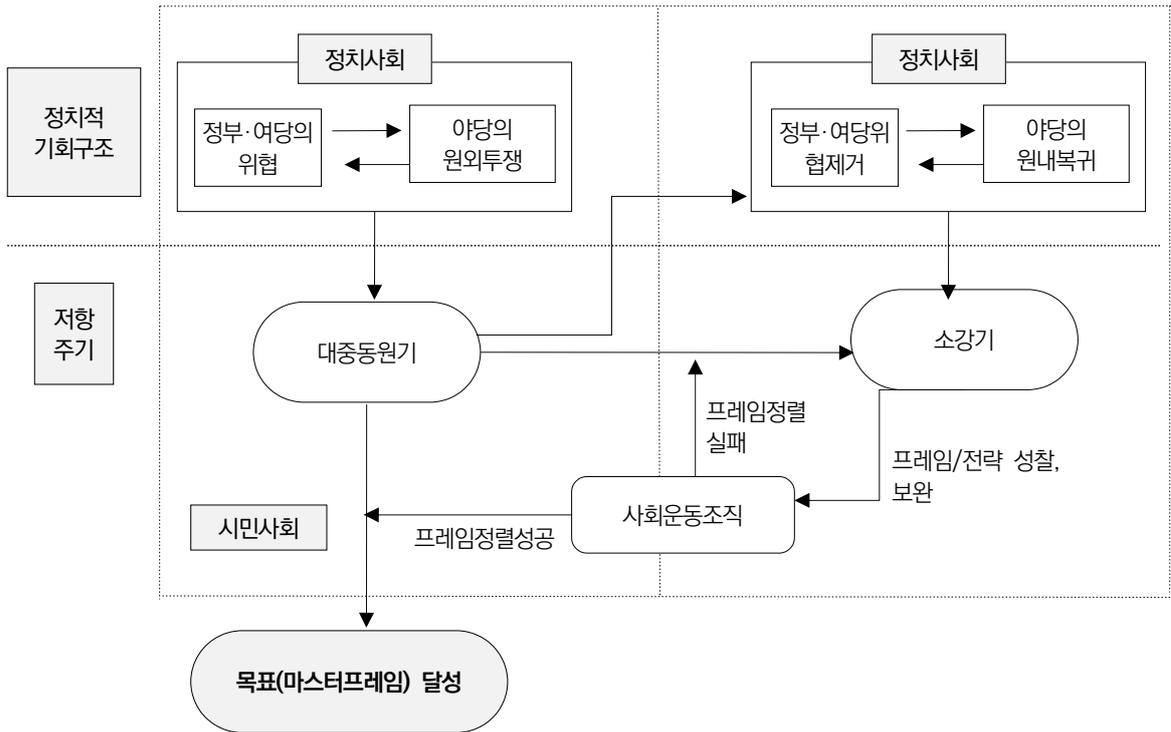
본 연구는 1985년 2.12총선국면에서 시작되어 1987년 6.29선언까지의 기간 동안의 ‘개헌’을 마스터 프레임으로 한 개헌운동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 시기가 하나의 저항주기를 형성한다고 보고자 한다. 개헌 프레임은 이미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리고 1980년 ‘서울의 봄’ 시기에 사회운동 프레임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 두 시기에는 그것을 가능케 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부재했다. 1970년대에는 정권측의 강고한 억압으로 개헌운동이 등장할 가능성이 사전에 봉쇄됐다. 또한 1980년 ‘서울의 봄’ 시기 역시 신군부에 의해 5.17 군부쿠데타가 발생함으로써 조기 봉쇄되었다.

1985년에 개헌운동이 촉발된 데에는 그것을 가능케 한 유리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개헌프레임의 정치적 기회구조는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의 권위주의체제라는 정치구조를 배경으로 ‘선거’ 시기와 선명야당의 등장으로 인해 활성화된 ‘국회’라는 부분적으로 열린 정치사회를 기회구조로 한다. 개헌은 1985년 2.12 총선에서 신민당이 선거공약으로 제기하고 원내에 제1야당으로 진입한 이후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이때 원내제1야당이 된 신민당은 그 스스로가 개헌프레임의 주창자이자 원외의 사회운동세력에게는 제도권 내의 동맹세력으로 기여하게 된다. 신민당은 국회내에서는 개헌의제를 다루는 제도권 내의 한 구성원이 되며 개헌 쟁점이 국회밖으로 넘어가 사회운동 프레임이 될 때에는 사회운동세력의 제도권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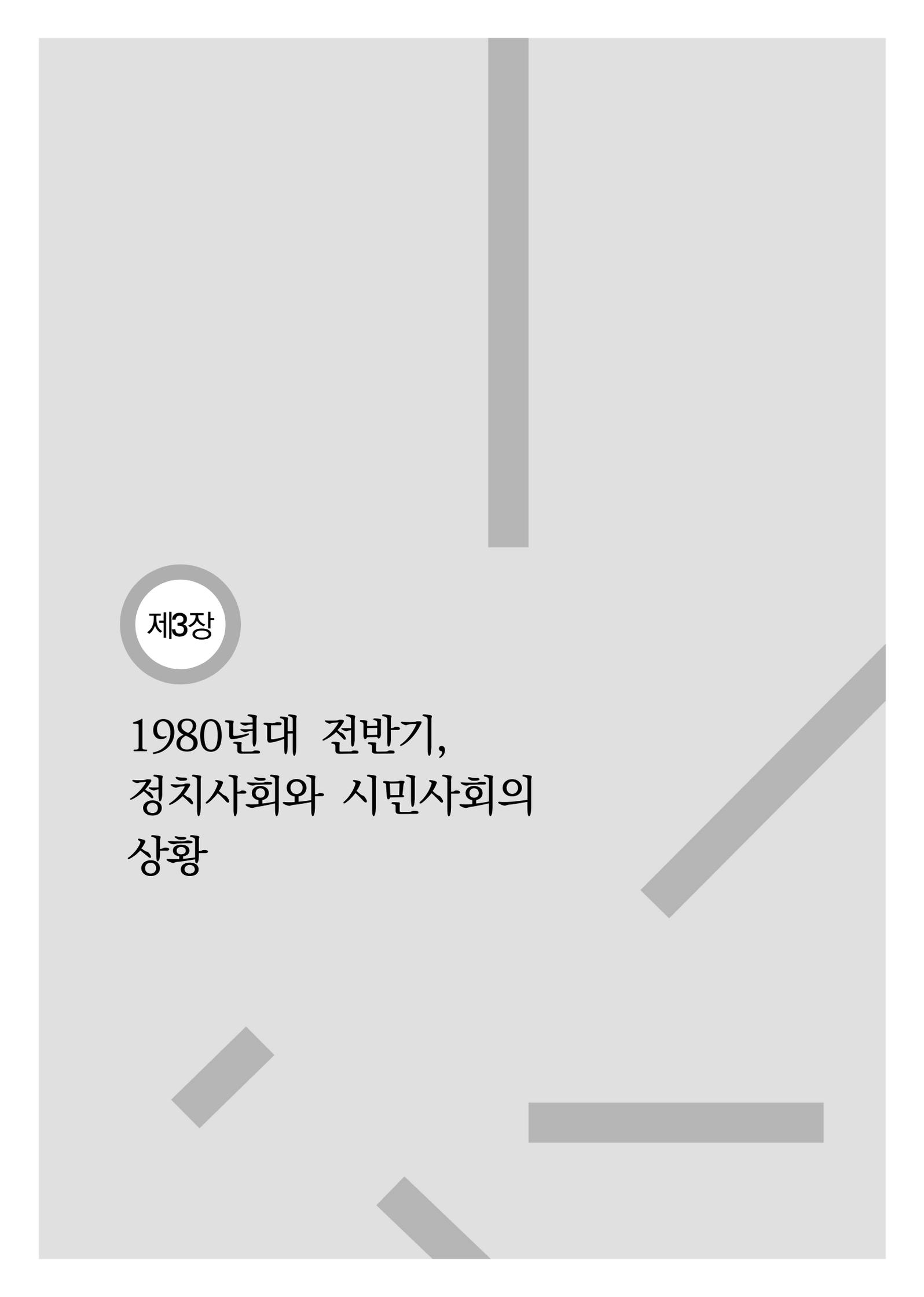
의 동맹세력으로서 기회구조가 되는 동시에 개헌운동의 일주체로 역할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헌정국은 그 출현기인 12대 총선거면을 제외하면 두번의 동원기와 두번의 소강기로 이루어진다. 이 때 동원기와 소강기를 나누는 것은 개헌프레임이 국회 내의 사안으로 다뤄지는지 아니면 국회밖의 운동 프레임으로 다뤄지는지에 따른다. 개헌프레임이 국회내에서 다뤄질 때 국회밖의 사회운동세력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이 되므로 사회운동세력의 입장에서는 ‘소강기’가 된다. 반면 개헌논의가 국회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여 야당이 원외투쟁에 돌입하게 될 때 이른바 ‘대중동원기’가 시작된다.



〈그림 2-1〉 마스터 프레임의 등장에 따른 저항주기의 전개





제3장

1980년대 전반기,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상황





# 1980년대 전반기,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상황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1980년대 전반기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상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는 본 연구의 대상인 1980년대 개헌운동이 등장하기 이전 시기로 개헌운동 발생을 위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조성되고 사회운동조직이 형성되어간 시기로서 특징을 갖는다.

1980년대 5공화국 전반기는 신군부에 의한 군부쿠데타와 광주항쟁진압을 통한 군부권위주의체제 2기의 정착, 패권정당체제로 인한 닫힌 정치사회라는 정치구조로 시작되었다.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유신시대의 대통령 선출방식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새롭게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1981년 3월 3일 다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7년단임제를 취하고 있었지만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부여된 권한은 거의 그대로 둔 채 대통령을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뽑는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신헌법의 연장에 가까웠다(성낙인 2013, 136).

쿠데타로 중단된 정치활동은 1980년 11월 22일 다시 재개된다. 그러나 개방된 정치사회의 부활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567명의 주요 정치인들이 정치활동 규제 대상자로 선정, 이후 8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되었다. 정치활동 규제대상자에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이른바 ‘3김’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유신시절의 여당 및 야당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정치활동이 재개되면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이 1981년 1월 15일 창당되었고 구 신민당 출신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한국당(이하 민한당)이 1월 17일, 구 민주공화당 출신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국민당(이하 국민당)이 1월 23일 각각 창당되었다(이계희 1992, 294). 군부정권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창당에도 깊이 관여했다.<sup>2</sup>

1981년 3월 25일 치러진 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은 35.6%의 낮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전체 의석의 55%인 151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 방식이 1선거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에, 전국구는 지역구 선거에서 제1당을 차지한 정당에 2/3를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여당이 과반수 의석확보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1대 국회는 여야간의 공방 같은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다. 야당들은 강력한 반대기능을 하기가 어려웠고 실제 야당이 정치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은 거의 없었다(김인 1983, 86).<sup>3</sup> 심지어는 11대 국회의

2 여당 창당에는 보안사령부가 야당제조를 중앙정보부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강원택 2015, 18).

상황을 하나의 패권정당과 다수의 위성정당으로 이루어진 패권정당체제라고 규정하고 있다(심지연 2006, 324-325).

제도정치권이 이처럼 사실상 그 기능이 정지되자 정치활동이 금지된 구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시도되었다. 김영삼은 1981년 5월 1일 연금에서 해제되자 측근들과 등산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6월 9일 민주산악회로 발전하게 된다(김영삼 2015, 213-214). 1982년 이 산행이 뉴욕 타임즈에 보도되자 이를 빌미로 김영삼은 다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는데 이에 김영삼은 1983년 5월 18일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당시 미국에 체류중이던 김대중은 김영삼의 단식에 지지를 표명하고 1983년 8.15 광복절에는 양김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다(김대중 2015, 432). 김영삼의 단식으로 김영삼계와 김대중계 정치인들은 다시 힘을 모으기로 결정한다. 이것이 이후 1984년 5월 18일 결성된 '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주협)'으로 이어졌다. 민주협은 신민당이라는 선명야당의 등장을 위한 산파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갔다.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이 펼쳐졌다. 그런데 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은 그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 비해 더 급진적이고 더 조직화된 형태를 띠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군부가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집권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김동춘 1998; 조대엽 200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광주항쟁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 분노와 자책감으로 학생운동, 나아가서는 사회운동 전체가 확대강화되도록 하는 거대한 원동력이었다.<sup>4</sup>

1980년대 사회운동세력은 이념적 급진화 경향을 띠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반미의식/민족주의적 이념성향이다. 광주항쟁 직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책임론이 제기되었고(정일준 2011, 297) 그것은 미국관련 기관에 대한 일련의 방화사건으로 이어졌다.<sup>5</sup> 1980년대 초반부터 학생운동권에는 반미주의가 급속히 확산되어 80년대 중반 이후에는 'NL노선'이라고 명명된 '교조적' 반미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조대엽 2005, 209).

다른 하나는 노동자/민중을 강조하는 경향이다. 그것은 1970년대부터 이어지는 서남동의 '민중신학', 한완상의 '민중사회학'과 같은 토착 이론의 영향에 더하여 80년대 초반부터 수입된 서구 맑시즘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백종국 1992; 정철희 1995; 박선웅 1998). 더불어 광주항쟁에서 민중들의 자발적 진출은 변혁의 주체로서 노동자/민중을 위한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이념적 급진화는 엄혹한 시절 사회운동세력을 내적으로 결집시키고 정권의 엄청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무기가 되었다. 그러나 운동세력을 일반대중들과 괴리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했다.

1980년대 사회운동세력은 조직적으로도 그 이전에 비해 보다 확대강화되었다. 1980년대 초반의 억압

3 심지연 전두환 대통령마저도 "11대때는 야당이 매우 협조적이어서 만만한 게 사실"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김성익 1992, 147).

4 한국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하나가 아닌 다양한 저항주기가 중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전체 반독재민주화운동이 1961년 5.16 군부쿠데타를 그 출발점으로 하는 장기적인 저항주기를 갖는다면 80년대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전체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주기에 포함되면서도 신군부의 집권과 광주항쟁이라는 새로운 계기로부터 새롭게 촉발된 주기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겠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저항주기에 대해서는 홍성태(2015) 참조.

5 미국관련 기관에 대한 방화사건으로는 1980년 12월 광주미문화원 방화를 시작으로 1982년 3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983년 9월의 대구미문화원 폭발사건, 1985년 5월에는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1985년 11월의 주한미상공회소 점거사건 등을 들 수 있다(조대엽 2005, 206; 정일준 2011, 297).

적 상황 속에서도 70년대의 조직을 보존하는 동시에 새로운 조직화 움직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83년 말 유화조치가 취해졌을 때 사회운동조직들이 빠른 속도로 복원될 수 있었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21). 유화국면을 계기로 공개조직들이 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첫 출발은 70년대 학생운동출신 인사들이 모여 1983년 9월 30일 결성한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이하 민청련)이다. 이후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조직 논의가 지속되다가 1984년 6월 29일 노동, 농민, 청년, 문화, 종교계 그리고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민중민주운동협의회(이하 민민협)가, 10월 16일에는 부문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재야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주통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가 각각 결성되었다. 이 두 단체는 별도로 결성되기 이전부터 통합 방안이 모색되었지만 조직의 수준과 형태 등에 대한 견해차이 때문에 별개의 조직으로 분리, 출범하게 되었다.

두 단체가 결성된 이후 곧바로 통합요구가 제기되었다. 실제로도 두 조직은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는데 민민협은 조직운동 원칙을 강조하고 아래로부터의 기층 민중운동 단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민적 대표성과 명망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다. 반면 국민회의는 각계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 전국규모의 조직을 지향, 단일한 조직으로의 통합성과 국민대표성이 강했지만 청년활동가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아 현실적 실행력의 한계가 있었다(이명식 2005, 23).

84년 하반기부터 두 단체는 통합협상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서로간의 강조점이 달라 합의가 쉽지 않았다.<sup>6</sup> 그러던 와중에 1985년 2.12 총선이 있었고 선거결과 사회운동권이 지지했던 신생 야당 신민당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두자 통합논의는 급진전되게 되고 1985년 3월 29일 민주민중통일연합(이하 민통련)의 결성으로 이어진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32).

민통련은 발족과 동시에 서울, 경북, 경남, 강원 등에서 지부조직을 결성해 나갔다. 1985년 9월 20일에는 2차 통합대회를 열어 발족 초기에 가입을 유보했던 민청련과 서노련, 개신교 운동단체 등 11개 단체를 추가로 가입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게 된다(정대화 2005, 220). 전국 지부를 갖는 구심점으로서 민통련이 결성됨에 따라 1980년대 사회운동은 개인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전 사회운동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실제 사회운동조직들을 연결하는 중위동원자(meso mobilization)로서 민통련이 결성되자 이후의 사회운동은 광범위한 연대조직형성을 통한 전국규모의 동시다발 집회가 가능한 수준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정철희 1996).

요약하면, 전두환정권 전반기는 군부쿠데타와 광주항쟁진압을 통한 군부권위주의체제 2기, 패권정당 체제로 인한 닫힌 정치사회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정치활동이 금지된 정치인들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중간지대에서 조직화를 해 나갔으며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세력은 급진적 이념을 토대로 과거보다 더 확

6 민통련 창립 당시 민민협 측과 국민회의 측은 새롭게 구성할 조직의 형태, 지도체제의 형태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려 있었다. 민민협 측이 단위 조직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문운동'과 '민중주체'를 실현하는 '협의체' 형태의 조직을 지향했다면 국민회의 측은 지도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당면한 정치투쟁을 더 힘있게 이뤘을 수 있는 연합체 형태의 단일조직체계를 주장했다(박우섭 1987, 327). 2.12 총선 이후 후자의 논의가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되면서 민통련은 국민회의 측 제안에 따라 연합형태로 결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동의하지 않았던 민청련과 범개신교세력은 이때 결합하지 않고 있다가 1985년 9월 20일에 결합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7), 이명식(2005) 등 참고할 것.

대 강화된 조직들을 형성해 나갔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조직화는 1985년 2.12 총선부터 본격화될 개헌운동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개헌에 대한 몇몇 선도적인 요구는 있었으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공론장의 부재로 인해 개헌운동이 착수되지는 못했다.



제4장

1980년대 개헌운동의 전개





## 1980년대 개헌운동의 전개

1980년대 제5공화국 전반기의 닫힌 정치사회는 1985년 2.12 총선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개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 2.12총선에서 ‘개헌’ 프레임이 제기되자 개헌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된다. 이장에서는 1985년 12대 총선부터 1987년 6.10민주항쟁에 이르는 1980년대 개헌운동의 전체 전개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도록 한다.

### 1 ■ 1985년 2.12총선과 ‘개헌’ 프레임의 등장

1985년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사회가 개방되기 시작했다. 아무리 군부독재체제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선출방식으로 직접선거를 보장한 이상 선거시기 동안 정치사회는 부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다. 후보들이 국민에게 다양한 공약을 내걸고 표를 호소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1981년 11대 총선과는 달리 정치활동 규제대상자였던 여러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이 허용되면서 12대 총선은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민주협 역시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 민주협은 선명야당을 표방한 신한민주당(이하 신민당)을 창당하여 선거에 참여하였으며 ‘직선제개헌’을 핵심 선거공약으로 제기한다. 이를 계기로 ‘개헌’ 프레임은 이후 1987년 6.10민주항쟁까지를 책임지는 마스터 프레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일이 처음 시작될 때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배하게 되는 것처럼 당시만 하더라도 개헌프레임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민주협의 신당창당과 총선 참여마저도 논쟁의 대상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국회의원 선거법은 1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인데다가 제1당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거는 여당인 민정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따라서 민주협 내에서는 총선에 참여할 것인지를 두고 참여론과 거부론으로 나뉘어 갈등이 빚어졌다. 1984년 12월 7일 소집된 민주협 전체운영위원회에서 참여거부론자들은 총선 참여가 전두환 정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며 선거에 참여하더라도 참패가 분명해 정권의 들러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97). 반면 참여론자들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한

당이 국민의 민주화 의지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거결과를 떠나서 자유와 인권, 민주화를 대변하는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추협 1988, 122). 격론 끝에 민추협은 신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그것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결정은 아니었다.

마침내 총선 참여가 결정되자 신당창당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85년 1월 18일 신민당 창당일에 이민우 총재는 ‘직선제 개헌’을 공식적인 선거공약으로 선포하게 된다. 직선제 개헌 공약 역시 총선용으로 갑작스레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1983년 단식투쟁 이틀 전인 5월 16일 김영삼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민주화를 위한 다섯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1) 구속인사 석방, 2) 정치인과 민주시민의 정치활동 보장, 3) 해직 교수, 학생, 근로자의 전면적인 복권조치, 4) 언론자유 보장, 5) 헌법개정, 반민주악법 폐지 및 제·개정 등이다(김영삼 2015, 248-249). 다섯번째 항목에서 ‘현행 헌법이 대통령 직선의 국민적 염원을 배반한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984년 5월 18일에 발표된 민추협의 창립선언서를 보면 민추협의 목표를 “국민이 자신의 정부를 선택할 수 있고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정부의 수립”에 두고 있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84). 따라서 민추협을 모태로 하여 창당된 신민당이 ‘직선제 개헌’을 제1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한편, 사회운동세력 역시 2.12총선을 중요한 정치적 계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민추협과 재야의 사회운동세력 사이에는 총선참여와 신당에 대한 지지를 놓고 사전조율이 이루어져 있었다.<sup>8</sup> 민추협은 재야민주세력과의 연대를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설정해 놓고 있기도 했다(민추협 1988, 161; 이용마 2015, 67).<sup>9</sup> 그러나 총선참여의 구체적인 방식을 둘러싸고 사회운동권 내에서도 몇 가지로 견해로 나뉘어 있었다. 류청하는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류청하 1992, 70-71). 먼저 선거보이콧 입장으로 현 체제 하에서 선거참여는 결과적으로 그 체제를 인정하게 되거나 보수야당의 주도권을 강화시켜 줄 뿐이므로 선거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2.12총선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참여가 폭발하면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 두번째는 제휴투쟁론으로 이는 대중의 정치의식이 급격히 고양되는 선거시기에 사회운동세력도 야당과 적극 제휴하여 후보전술을 포함, 선거공간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7 사실 김영삼과 민추협이 애초부터 ‘개헌’을 중시하였던 이유는 이미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었을 때부터 개헌이 중요한 정치 프레임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1974년에는 개헌입법청원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고(이재영 1992) 1980년 ‘서울의 봄’ 동안에도 개헌은 주요한 대중동원 프레임으로 기여했다(김영삼 2015). 1970년대의 개헌서명운동, 야당의 개헌헌판식 행사와 같은 운동 레퍼토리가 1980년대에도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양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있음을 암시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121).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의 경우 긴급조치와 같은 정권측의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 1980년에는 신군부의 쿠데타로 저항이 확산되기도 전에 조기봉쇄된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앞선 두번의 시기 동안에는 개헌 프레임이 마스터 프레임이 될 만한 정치적 기회구조가 조성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헌정국의 본격적인 개시는 1985년에 신민당이 총선이라는 열린 기회구조 속에서 개헌 프레임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단, 과거의 기억과 운동 레퍼토리는 1980년대 중반의 개헌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이 시기 직선제 개헌의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된 ‘유신 이전의 3공화국 헌법으로 돌아가자’라든가 ‘80년 서울의 봄에 합의된 헌법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이 제기된 점도 ‘과거의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8 민추협은 신당을 창당하기 전에 국민회의의 문익환 목사 등 재야세력으로부터 사전에 동의와 지지를 구했다(민추협 1988, 109-111; 이용마 2015, 67).

9 민추협의 결성선언문에는 자유주의적 헌정질서뿐만 아니라 분배의 정의와 복지사회 등의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민추협이 재야와 학생, 노동운동을 연결하는 연대체의 역할을 수행했고 재야쪽에서 요구하는 민중생존권에 대한 요구를 담아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조성대는 지적하고 있다(조성대 2015, 100).

주장은 당시만 하더라도 야당과 제휴를 실현할 대표체도 없는 실정이라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

세번째는 민정당 낙선투쟁론으로 보수야당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혹은 지지대신 전두환정권과 민정당의 본질을 폭로함으로써 민정당 후보의 낙선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이 입장은 보수야당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반(反)민정당이라는 보다 더 큰 합의점 밑에서 협력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사회운동세력의 동의를 얻었다. 학생운동의 경우 '전국대학연합 선거대책위원회', '민주총선쟁취학생연합', '민정당재집권저지투쟁연합' 등을 결성하여 선거운동에 합류하였고 총선거면에서 대학생들의 유세장 활동은 신민당 승리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의연구소 2010, 235).

2.12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대단히 높아 투표율이 11대의 78.4%를 훨씬 상회하는 84.2%로 '5.16 이후 최대 투표율'이라는 기록을 남겼다(류청하 1992, 73). 선거결과 민정당은 35.3% 득표에 총의석 148석으로 원내 다수당이 되었고, 신민당은 29.2% 득표에 총의석 67석을 획득하면서 원내제1야당의 지위로 올라섰다(〈표 4-1〉 참조).

〈표 4-1〉 1985년 2.12 12대 총선결과

	민정당	신민당	민한당	국민당
득표율(%)	35.2	29.3	19.7	9.2
지역구의석수	87	50	26	15
전국구 의석수	61	17	9	5
총의석수(의석비율)	148(53.5%)	67(24.3%)	36(12.7%)	20(7.2%)

출처: 국회사무처(2008, 63)

선거결과에 대해 민정당은 지난 선거에 비해 비록 3석을 잃었지만 지지율은 크게 줄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의석차로 다수당이 됨으로써 민정당 정부의 지위와 업적에 대한 국민의 인정을 얻었다고 해석했다. 반면 신민당은 선명야당의 승리와 기존 온건야당들의 패배는 민정당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대와 민주화 요구의 표시라고 해석하였다(이갑윤 1985, 48). 여야의 상반된 해석은 어느 것이나 온당해 보이지만 대도시로 한정했을 때는 민정당의 패배, 신민당의 승리가 보다 분명해 보인다. 대도시의 대부분 지역에서 민정당은 신민당에 이어 2위에 머물러 대도시 지역에서의 민심이반이 좀더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제정구 1985, 361).

신민당이 선명야당을 선언하고 원내제1야당이 되면서 비로소 한국의 의회는 공개적 정치공론장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개헌은 총선을 경유하면서 일반대중에게도 익숙한 프레임이 되었다. 더불어 개헌은 여야 정당은 물론이고 사회운동세력에게도 피할 수 없는 정치일정이 되었다. 바야흐로 '개헌정국'이 시작된 것이다.

## 2 ■ 사회운동세력의 이념적 급진화와 5.3인천대회에서의 패배

### 1) 1차 소강기: 사회운동세력의 이념적 급진화

1985년 2.12 총선이 끝나고 대중동원이 가라앉은 후 1차 소강기가 도래한다. 이 시기는 1년 후인 1986년 1월 전두환의 신년 국정연설 때까지 지속된다. 이 시기 개헌논의의 장은 국회였다. 1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전두환 대통령은 주요 정당대표와의 회담에서 ‘모든 정치를 장내로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동아일보 1985/5/3). 신민당의 입장에서도 아무리 선명야당을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원내에 진입한 정당이 어떤 명분도 없이 곧바로 원외투쟁에 돌입하기는 어려웠다.

민정당은 ‘직선제 개헌을 위시해 어떤 정치현안도 여야대회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호헌을 통한 정권교체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동아일보 1985/3/14). 노태우는 12대 국회 첫 번째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40년 가까운 우리의 헌정사적 경험으로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에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은 개인의 장기집권을 반대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확립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민정당은 이미 국민에게 확약한대로 호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1985/5/18). 앞선 정권들이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했다면 자신들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 호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펼친 것이다. 이 입장은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표명된다. ‘대화는 하겠으나 호헌’이라는 이 입장은 그러나 1986년 1월 전두환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호헌은 임기가 끝나고 88올림픽도 마친 89년이나 가능하며 지금은 ‘대화도 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바뀌면서 종결되게 된다.

한편, 총선 이후 야권은 신민당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었다. 민한당에서 32명이 집단 탈당하여 신민당으로 ‘이적’함으로써 신민당은 임시국회 소집이 가능한 원내의석의 3분의 1을 훨씬 넘는 103석의 거대야당이 되었다(류청하 1992, 73). 사실상 양당체제로 재편된 것이다. 신민당은 8월의 전당대회에서 직선제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8월 말에는 당내에 개헌추진본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법특위) 구성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민정당이 이 시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호헌론’을 고수했기 때문에 신민당의 개헌시도나 헌법특위 구성시도가 국회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게다가 당내 갈등도 불거졌는데 신민당 내의 민주협계와 비민주협계 간에 직선제 개헌 당론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결국 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던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신보수회’가 집단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b, 248).<sup>10</sup> 이들의 탈당으로 신민당 의석은 90석으로 다시 재적의원 1/3 이하로 줄어들게 되었다. 신민당으로서는 1년 동안 별반 소득도 없이 정치사회에 남아 여당과의 협상을 시도한 셈이 되었

10 85년 12월 31일 신민당을 집단탈당한 신보수회는 신민당의 당론과는 달리 내각제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신민당내부에서 지역구배정이나 당직배분에서 어느 정도 소외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이들의 탈당이 완전히 명분없는 일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 시점에서 그렇게 서둘러 탈당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신민당의 전열을 흐트러 놓으려는 ‘외부공작의 소행’일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백종화 1986/2).

다.<sup>11</sup>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시도해 보았으나 돌아온 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개헌논의불가’ 통보였을 때 드디어 신민당은 원외투쟁을 시도하게 된다.

한편, 대중동원이 가라앉았던 이 시기 동안 사회운동단체들은 본격적으로 개헌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한다. 사실 사회운동단체들은 총선때까지만 하더라도 개헌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총선을 경유하면서 개헌프레임이 대중의 강한 지지를 얻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게 된다. 이때 비로소 개헌은 정당의 공약으로 남지 않고 사회운동 프레임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sup>12</sup> 그런데 이 시기 개헌에 대한 사회운동단체들의 일관된 특징은 야당의 ‘직선제 개헌’론에 비판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급진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급진화의 과정은 1986년 5월 3일 인천대회에 이르는 1차 대중동원기까지 지속됐다.

총선 직후 민민협과 국민회의의 통합으로 새롭게 사회운동의 구심으로 부상한 민통련의 경우 “군사독재를 퇴진시키고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민주헌법을 제정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조직결성의 과제로 내걸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66). 그리고 이러한 과제달성을 위해 85년 11월 20일 민주헌법쟁취위원회(이하 민헌쟁위)를 구성했다. 그런데 이때 민주헌법쟁취는 전두환정권의 퇴진이 전제될 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투쟁의 목표는 ‘군사독재퇴진→민주헌법제정→민주정부수립’의 순서가 되는 것이다.

물론 민통련의 ‘민주헌법’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1986년 “신년사”를 보면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제한, 국회의 국정감사권 보장, 사법권의 독립 등 신민당, 민주협이 개정헌법 내용과 대동소이하다.<sup>13</sup> 차이점이 있다면 민통련의 경우 이와 같은 민주헌법이 군사독재정권의 퇴진없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정권퇴진’이 ‘민주헌법’에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선순위의 차이점이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이 1986년 5.3인천대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헌법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은 민통련과 신민당, 민주협이 추구하는 민주정부의 상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차이는 손쉽게 화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1987년 5월 국본으로의 제휴와 연대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민통련의 입장은 민주화운동세력 가운데에서 가장 온건한 편에 속했다. 노동운동단체나 학생운동권은 보다 더 급진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이 당시 대표적인 노동운동단체인 서울노동운동연합(이하 서노련)은 1985년 8월 25일 창립대회 결의문에서 “우리는 직선제를 포함한 전국민적 민주개헌 투쟁에 총력을 다한다”고 선언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기사연 1986, 24). 신민당의 직선제개헌을 지지하는 듯 보이는 이러한 입장은 얼마 뒤 바뀌는데 ‘직선제에 그치는 개헌투쟁이 아니라 민중이 참여하는 헌법제정 민중의회의 소집과 거기에서의 새 민주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민중민주

11 신민당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 다소 기회주의적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갖 원내에 진입한 거대야당이라면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 보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2 그 과정은 스노우 외(1986)의 개념으로 프레임 정렬(frame alignment)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3 “신년사: 1986년을 민주화의 해, 민족통일의 해, 민중해방의 해로!”(1986.1.7.;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72~75).

개헌투쟁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체되었다. 이 입장은 이후 민주, 민족, 민중의 삼민이 중심이 되는 '삼민헌법쟁취론'으로 정교화된다(Ibid., 24-6). 삼민헌법제정론은 주류 학생운동세력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졌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250).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아닌 민중이 중심이 되어 삼민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사회운동세력은 신민당과 다른 길로 들어섰다.

## 2) 1차 대중동원기: 신민당의 원외투쟁과 5.3인천대회에서의 패배

1986년 1월 전두환 대통령의 강경 '호헌론'으로 촉발된 1차 대중동원기는 1986년 2월 12일 신민당이 원외투쟁의 한 방법으로 개헌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개헌서명운동이 정권의 방해와 탄압에도 종교계 등 시민사회로 확산되어 나가자 2월 24일 전두환 대통령은 주요 당대표와의 청와대회담에서 89년 이후에 헌법을 개정하되 개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내에 헌법특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정권의 호헌론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이다. 그러나 '89년 개헌'은 사실상 '임기내 호헌'과 마찬가지로 옳으므로 신민당은 원외투쟁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한다.

신민당은 개헌서명운동에 더하여 개헌현판식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개헌현판식 집회는 3월 11일 서울지부 결성대회를 시작으로 3월 23일 부산, 30일 광주, 4월 5일 대구, 19일 대전, 26일 청주, 5월 3일 인천, 10일 마산, 31일 전주 순으로 이루어졌다. 3월 11일 서울대회의 참석자 수는 2000명에 그쳤지만 부산대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부산대회에 5만의 군중이 몰렸고 광주대회에는 20~30만의 군중이 운집했다. 이후에도 개헌현판식 집회에는 많은 군중이 참여, 4월 5일 대구대회때 5만, 4월 19일 대전과 4월 26일 청주에서도 3-5만의 군중이 몰려들었다(기사연 1986, 44).<sup>14</sup> 부산과 광주에서의 열기는 김영삼과 김대중의 정치적 기반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군사정권의 중심지역이었던 대구와 무관심지역인 대전, 청주 등에서도 상당한 대중이 참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전국으로 보편화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었다. 이처럼 1986년 개헌현판식 집회를 통해 지역에서의 민주화열망이 매우 높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1987년 국민운동본부의 6월 10일 국민대회는 첫번째 대회부터 전국대회로 치러질 수 있었다.

신민당이 나서서 대중동원을 시작하자 시민사회 역시 이에 적극 가담하기 시작한다. 2월 12일 신민당과 민주협이 개헌서명운동이 시작되자 민통련이 3월 5일, 이를 종교계가 이어받아 3월 13일에는 개신교측인 KNCC가 그리고 4월 13일에는 가톨릭측의 명동성당이 개헌서명운동을 시작해 나갔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253).<sup>15</sup> 나아가 개헌서명운동은 종교계와 교수들의 자발적인

14 전두환 정권은 2월의 개헌서명운동에 비해 3월부터 시작된 개헌현판식집회에 오히려 유연하게 대응했는데 그것은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붕괴로 인한 정권내부적 충격과 미국이 한국정부에는 '개헌집회 허용'의 압력을 신민당에게는 '평화적 집회개최'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기도 했다(기사연 1986, 45). 그러나 현판식집회에 구름군중이 몰려든 것은 정권의 유연한 대응때문이기보다 그만큼 개헌 프레임 자체의 높은 대중동원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15 신민당의 개헌서명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1985년 12월 4일 민주협, 1986년 2월 4일 전학련 소속 학생들이 먼저 개헌서명운동을 시작하였으나 신민당의 개헌서명운동 만큼의 파급력을 불러오지 못했다.

시국선언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시국선언정국’을 조성했다. 개헌서명운동, 개헌현판식집회, 시국선언문 발표가 어우러진 1986년 3월~4월의 상황은 1년 후인 1987년 4월~5월에 펼쳐질 ‘시국선언정국’을 미리 보여주는 듯 하다(〈표 4-2〉 참조).

〈표 4-2〉 1986년 개헌서명운동, 시국선언 발표, 개헌현판식집회

날짜	개헌서명운동	시국선언 발표	개헌 현판식	날짜	개헌서명운동	시국선언 발표	개헌 현판식
1985. 12.4	민추협			1986. 4.16		전남대학교수 43명	
1986. 2.4	전학련			4.17		외대학교수 28명, 계명대학교수 49명	
2.12	신민당			4.18		연세대학교수 32명, 이대학교수 10명, 영남대학교수 50명	
3.4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4.19		울산대학교수 20명, 동의대학교수 10명, 부산여대학교수 10명	대전 현판식
3.5	민통련			4.21		경남대학교수 30명, 경기대학교수 14명, 전북대학교수 47명	
3.9		김수환 추기경		4.23		인하대학교수 20명	
3.11		KNCC	서울 현판식	4.24		천주교전주교구사제단 신부 53명, 서강대학교수 27명	
3.13	KNCC			4.25		송전대학교수 14명, 충북대학교수 32명	
3.17	KNCC 개헌서명자 1차명단 발표			4.26		대한YMCA연맹 전국대의원대회, 장신대학교수 26명 전원, 경기대 총장	청주 현판식
3.23			부산 현판식	4.28		경북대학교수 32명	
3.28		고려대학교수 28명		4.29		경희대학교수 19명, 충남대학교수 21명	
3.30			광주 현판식	5.3	신민당 개헌서명자 70만명 발표		인천 현판식
4.2		한신대학교수 42명		5.9		대한조계종 승려 152명	
4.5			대구 현판식	5.10			마산 현판식
4.11		성균관대학교수 35명, 서울대 교수 48명		5.16		방통대학교수 16명	
4.13	명동성당			5.28		재미한국인대학교수 43명	
4.15		감신대학교수 10명		5.31			전주 현판식

\*출처: 기사연(198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2010), 네이버의 뉴스라이브러리를 토대로 재구성

사회운동세력은 개헌헌판식집회에도 동참했다. 처음에는 신민당의 개헌헌판식행사를 관망하고 있었으나 지역에서의 행사에 수만의 인파가 모이는 것을 목도하고 민통련은 이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sup>16</sup> 이때 결합의 방식은 신민당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가 치러지는 건물의 외부에서 민통련의 민중대회를 옥외집회 형태로 치르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민통련의 결합에 대해서는 3월 17일 신민당, 민주협과 민통련 사이에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락기구’(이하 민국련)가 개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유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국련은 말 그대로 연락차원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상호간 행사에 대한 조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7</sup> 신민당은 민통련의 옥외집회를 묵인하였고 민통련을 비롯한 사회운동단체들은 개헌헌판식에 모인 대중을 대상으로 ‘직선제 개헌’을 넘어선 ‘군부독재타도’, ‘민주정부수립’ 같은 슬로건을 제창하기도 했다.

1986년 2월부터 시작된 개헌서명운동, 개헌헌판식과 민중대회, 그리고 교수들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국선언의 결과 전두환정권은 결국 호헌론에서 개헌론으로 한 발 물러서게 된다. 4월 30일 여야3당 대표와의 오찬회의에서 전두환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임기내에도 개헌 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다(경향신문 1986/4/30). 그러면서 개헌서명운동과 같은 원외투쟁이나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민당은 정권의 이러한 선언을 ‘진일보’로 해석하고 헌법특위 개설 등 원내일정을 조율해 나가면서도 ‘직선제 개헌’ 등 개헌의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가두의 개헌서명운동은 중단하되 건물 내부에서 하는 개헌헌판식 등은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이준한 2014, 12).

그런데 4월말부터 신민당과 민주협을 비롯한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 또 사회운동세력들 사이에서도 분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회운동세력의 이념적 급진화가 진전되면서 더 이상 제도권 야당과 공존하기 어려운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 첫번째 사건이 이른바 ‘민국련 사건’이다. 당시 학생운동권에서 반미구호가 등장하고 분신사태가 잇따르자 4월 29일 민국련과 김대중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조성대 2015, 111). 그러나 민국련과 김대중의 ‘우려’에 동의할 수 없었던 민통련은 5월 1일 성명을 내고 민국련을 탈퇴하였으며 지도부 전원이 사퇴한다(이명식 2005, 28).

두번째 사건은 5월 3일 인천민중대회 사건이다. 민국련도 와해되면서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개최된 인천민중대회는 광주항쟁 이후 당시까지 가장 거대한 수도권 집회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는 별도로 대중의 정서와 괴리된 이념적 급진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되었다.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집회였던 만큼 사회운동세력은 인천대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그리고 민통련,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인사연), 인천지역노동운동연합(인노련), 서노련은 물론 서울대의 자민투, 민민투 등 관련 조직들은 거의 모두가 참여했다(이준한 2014, 12). 그런데

16 신민당의 광주대회 이후 민통련 내 지역운동협의회(이하 지운협)는 개헌헌판식에 민통련이 적극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민통련 집행부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두 가지 주장이 엇갈리게 되었는데 부문운동 측은 ‘정치권의 지역행사에 민통련이 동참할 필요가 있는가? 민통련과 신민당은 개헌문제 입장이 다르므로 운동을 따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지운협 측은 ‘민통련보다 야당 목소리가 더 영향력 있으므로 이를 방치하면 개헌문제가 여야 타협으로 귀결될 수 있다. 개헌에 대한 민통련 입장을 널리 선전할 공간으로 개헌헌판식 집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토론 끝에 지운협 측 입장이 받아들여졌고 민통련은 대구집회부터는 개헌헌판식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게 된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49).

17 “민주헌법쟁취투쟁의 평가와 반성.” <민주통일5호>. 1986/8/14(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135).

막상 현장에서는 신민당의 현판식이 개최되기도 전에 최루탄이 난사되고 학생과 경찰 간의 폭투가 벌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되었고 신민당의 개헌현판식은 결국 무산되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2010, 263). 이러한 아수라장 속에서 일반대중들은 모두 흩어졌으며 인천대회는 운동권들만의 고립된 집회가 되고 말았다. 또한 단체별로 주도권 다툼으로 사전조율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민통련은 민통련대로 서노련은 서노련대로 학생운동권은 그들대로 따로 집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sup>18</sup>

인천대회에서는 신민당도 전두환정권 및 민정당과 마찬가지로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신민당은 4월 30일 청와대에서의 전두환 대통령의 선언을 ‘진일보’로 평가하고 개헌서명운동을 중단했다.<sup>19</sup> 이것이 사회운동세력에게는 ‘보수대연합의 전조’로 비춰졌다(이준한 2014, 12-13). 이날 인천에 뿌려진 유인물은 총 50여종이었으며 단체별로 통일되지 않은 구호가 외쳐졌다. 민통련 측은 ‘민주헌법쟁취’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으나 서노련과 인노련은 ‘삼민헌법 쟁취’를 주장했고 학생운동의 민민투는 ‘제헌의회 소집’을 주장, 학생운동의 자민투는 김세진, 이재호 분신과 맞물려 ‘미제축출, 반전반핵’, ‘양키고함’ 등을 외쳤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53). 이러한 구호가 얼마나 일반대중의 수용범위를 넘어섰는지는 당시 시국선언을 이끌었던 교수들의 시국선언문과 대조해 보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시국선언문에서 교수들은 ‘민주화의 핵심은 개헌’이며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가질 자유가 있다’, ‘개헌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도의 온건한 견해를 밝혔다(동아일보 1986/4/12).

인천대회 이후 민통련을 포함한 참여단체 지도부들에 대한 수배와 탄압이 시작되면서 개헌운동을 포함한 전체 민주화운동은 장기 수세기로 접어들게 된다. 신민당과 양김은 5월 6일 성명에서 모든 민주인사 및 재야단체와 연대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지부 결성대회와 현판식을 곧바로 중단하지는 않았다(서중석 2011, 162). 그러나 이미 대중동원의 수위는 확연히 사그러든 이후였다.

### 3 ■ 사회운동세력의 이념적 온건화와 1987년 6.10민주항쟁의 성공

#### 1) 2차 소강기: 사회운동세력의 이념적 온건화

두 번째 소강기는 1986년 5월부터 1987년 4.13호헌조치까지 지속되었다. 5.3인천대회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진행되고 여론의 분위기도 비판적으로 돌아서자 신민당은 급속히 원내합의개헌으로 기울었다. 대중동원은 약화되고 무대의 중심은 다시 의회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개헌운동은 .....

18 “민주헌법쟁취투쟁의 평가와 반성.” 〈민주통일5호〉. 1986/8/14(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138).

19 또한 이민주 신민당 총재가 “소수이겠지만 좌익학생들을 단호히 다스려야 하며 민주화운동에 이런 사람들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도 신민당에 대한 민주화운동권의 비판을 불렀다. 5월 1일 민통련은 보수대연합의 전조라고 신민당을 강력히 비판했고 서노련 및 인노련은 물론 학생운동권도 민통련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이준한 2014, 13)

소강기로 접어들었다.

5월 27일 신민당은 공개적으로 국회헌법특위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틀 뒤 노태우 민정당 대표와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6월 임시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에 합의한다(심지연 2006, 352). 6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자 본격적으로 헌법특위를 중심으로 여야간 공방이 이루어지게 된다. 민정당은 곧 개헌안 마련작업에 착수하였고 8월 6일 그 결과물로서 내각제 개헌안을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게 된다(김성익 1992, 131~139).

이제 정권측의 입장은 호헌론에서 89년 개헌논의로, 이후 89년 개헌으로 다시 여야합의가 이루어지면 임기내 개헌에서 86년내 개헌, 그리고 86년 여름이 되면 내각제 개헌으로 변경되었다. 계속해서 개헌 쪽으로 이동해 온 셈이다. 물론 민정당의 '수상중심형 내각제' 개헌안은 최고통수권자를 선거인단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에서 집권당의 다수의석이 보장되는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라 '기만적'이라는 평가는 가능하다.<sup>20</sup> 그럼에도 이는 그동안의 개헌운동의 성과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45명으로 구성된 헌법특위는 7월 30일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을 절충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심지연 2006, 352). 양김을 중심으로 한 신민당의 주류세력이 직선제 개헌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특위에서의 논의가 난항을 겪자 김영삼과 김대중은 9월 29일 헌법특위 불참을 선언하고 전두환 대통령과 양김 등 3인실세회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월 10일 이민우 총재는 국회대표연설에서 직선제와 내각제를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선택적 국민투표'안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유치에 자신감을 획득한 정권은 10월 13일 서울대 대자보사건, 10월 14일 유성환 의원의 '국시발언' 등의 '호재'에 힘입어 건국대 사태와 같은 탄압, 또 일명 '금강산담' 건설위기사설, '비상 조치 선포', '친위 쿠데타', '김대중 재수감' 등의 '소문'을 흘리면서 정국을 긴장상태로 몰고 갔다(서중석 2011, 168). 바로 이런 위기상황에서 11월 5일 김대중은 현 정권이 대통령 직선제를 수락한다면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김대중 2015, 466).

급기야 1986년 12월 24일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선민주화 후 내각제 협상'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이민우 구상'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 이틀 후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이에 화답하여 "의원 내각제 협상 용의를 표명한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김대중 2015, 475). 이러한 흐름을 끊기 위해 김대중과 김영삼은 1987년 1월 7일 다시한번 직선제 당론을 확인한다. 나아가 내각제를 지지하면서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철승 등 당내 비주류를 배제하고 직선제 개헌투쟁을 선명히 전개하기 위해 4월 8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게 된다(서중석 2011, 169). 4월 13일 통일민주당 발기인 대회가 개최되던 날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조치가 발표되면서 국면은 다시 대중동원기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인천대회사건 이후 민통련을 포함한 사회운동단체들은 정권의 탄압으로 조직자체가 와해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주요단체들을 중심으로 인천사건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

20 편집부. "현 정치정세의 인식과 향후 전망, 그 과제." <민주통일> 5호(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146). 실제 당시 국회의원 선거가 1선거구 2인 당선제로 중선거구제였기 때문에 여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에 따른 개헌프레임에 대한 관점의 변화라는 매우 중요한 성찰이 이루어졌다. 민통련의 경우 5.3인천대 회때까지만 하더라도 ‘정권퇴진을 전제한 민주헌법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1986년 하반기에는 당 장의 정권퇴진이 아닌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저지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온건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1986년 가을 즈음에 발간된 것으로 보이는 민통련 기관지 <민주통일>5호에 보면 당시 정세에서 문제는 “헌법문제를 둘러싸고 보다 노골화, 구체화될 미국과 현 정권의 군사독재체제 연장음 모”라고 규정하고 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154).

더불어 이 문건은 정권측의 ‘내각제 개헌안’을 통한 ‘군사독재 영구화 음모’와 ‘보수대연합 기도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야권의 타협가능성’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ibid., 155). 신민당의 ‘직선제개헌’을 지지한다는 언급은 없으나 ‘내각제 개헌안의 기만성 폭로’, ‘야권의 타협가능성에 대한 경고’ 등으로 미루어보아 사실상 직선제개헌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목표의 수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 운동세력의 결집과 단결, 연대의 추구’, ‘유연한 대응’, ‘탄력성’ 등을 지적한 부분이 눈에 띄는 데 5.3인천사건과 그 이후의 탄압 및 고립적 상황에 대한 평가와 반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21</sup> 이러한 성찰은 국민운동본부 발족 이후인 1987년 6월 5일 발간한 민통련 기관지 <민중의 소리> 30호의 “국민운동본부는 해방의 구심점: 6.10대회에 민민운동 총력 동원해야”에서 좀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관련 부분을 인용해 보면,

“... 이 기구[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다소 이질적인 인자들[야당 등 정치권]을 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운동이 이루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 결집의 반영이 국민운동본부라고 보고 성실하고 열성적인 자세로 이 기구에서 일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근래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서 정립된 이론가운데 일부가 이 기구의 성격이 애매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리라는 점도 알고 있다. 그러나 세계사상의 모든 해방투쟁에서 반민중·반민주적 체제에 맞서는 효율적 연합전선의 건설 없이 해방의 단초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역사적 교훈을 믿는 우리는 국민운동본부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는다. ... 지난해의 인천5.3투쟁에서 민민운동이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대중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뼈아픈 과오가 이번에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444-445; []표기는 전후맥락을 고려하여 인용자가 삽입).

한편, 비슷한 온건화 경향이 학생운동에서도 나타났다. 1985년 말에 학생운동권에 등장한 반제민족해방계열은 1986년 초부터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이 수용된 ‘혁명적 대중조직론’을 표방하고 나섰는데 이들은 서울대 ‘구국학생연맹(이하 구학연)’, 고대의 ‘애국학생회’, 연대의 ‘반미구국학생동맹’ 등의 비합

21 예를 들면, “단순한 ‘헌특분쇄와 보수대연합 저지’는 그 기만성의 폭로와 비타협적 투쟁의 부각이라는 강점도 있지만 운동의 고립을 탈피하고 투쟁공간을 넓혀갈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 “전술에 있어서 상황 전개에 조응하는 유연한 대응과 함께 슬로건에 있어서도 탄력성을 발휘해야 한다”, 또 “대중과 함께 싸우고 대중과 함께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대중투쟁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와 같은 부분을 들 수 있을 것이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155).

법조직을 결성했다(강신철 외 1988). 이들은 1986년 상반기때만 하더라도 공개투쟁기구인 자민투를 조직하고 반미투쟁을 벌여나갔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255). 특히 서울대 학생 김세진, 이재호열사의 분신을 야기한 전방입소교육 거부투쟁은 급진적인 반미운동으로 비춰졌고 이들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흐름은 1986년 10월 13일 서울대 대자보 사건때까지도 지속되었다.<sup>22</sup>

그러나 이들 내부에서 선도성과 차별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학생대중 동원에 실패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반성이 제기되었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65-6). 이러한 반성은 곧바로 학생운동에 반영되었는데 그것은 구학련 계열의 반미투쟁 이면에 놓인 '대중화전략'과 잘 결합되었다. 예컨대 이들이 펴낸 <품성론> 팜플렛은 관념적 수준이 아니라 현장에서 대중화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들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1986년 하반기 학생운동권에서 제기된 온건화 요구와 잘 조응될 수 있었다(조대엽 2005, 210).<sup>23</sup> 이러한 온건화 경향은 1986년 10월 28일 건국대에서 개최된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에서 신민당을 포함하여 '범국민운동연합'을 결성하고 '직선제 개헌투쟁'과 '민주적 제 권리 쟁취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6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정권이 건국대를 원천봉쇄하고 집회 사흘만에 1525명 연행, 1288명을 구속하자 대중노선은 보다 더 강조되었다. 화염병 사용을 당연시했던 과감한 투쟁 대신 비폭력노선이 강조되었고 학생운동조직 내에 설치된 상설적인 반합법투쟁위원회가 해체되고 학생회 중심의 학생운동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서중석 2011, 219).

물론 당시 구학련-자민투 계열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전학련-민민투 계열의 학생운동권은 예외였다.<sup>24</sup> 민민투 계열 역시 1986년 상반기 노선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있었으나 이들의 결론은 민중이 스스로 권력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불철저한 개헌이 아닌 전면적인 국회해산과 제헌의회(CA) 소집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270). 구학련이 대중화전략을 전면배치하면서 온건화된 외양을 보였다면 전학련은 반대로 보다 더 급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1986년 가을 학생회장 선거에서 비폭력노선, 학원민주화, 민주정권 수립 등을 공약으로 내건 NL계 학생운동권은 폭력투쟁 불사, 제헌의회소집투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CA노선과의 경쟁에서 대거 승리하였다(서중석 2011, 219).<sup>25</sup> 학생 대중들은 CA의 급진노선보다 NL의 온건노선을 더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듬해 3월 서울대, 연고대 등에서 치러진 총학생회장 선

22 서울대 대자보사건이란 북한의 '민주조선' 사설을 일반 학생이 다니는 곳에 그대로 전제한 사건을 말한다(서중석 2011, 209). 구학련에서는 그것을 북한 바로알기 운동의 첫 시도로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충격요법으로 대응해 보자는 의도에서 했다고 했지만 전전권의 탄압의 빌미만 주었다.

23 <품성론>에는 소박하고 겸손한 품성, 용감한 사람의 품성 등과 같이 대중에게 유리되지 않는 용어와 말투, 예술활동, 시청각매체, 연회에 이르기까지 대중적 일체성을 가질 수 있는 대단히 구체적인 행동방식이 제시되었다(조대엽 2005, 210).

24 자민투가 처음 서울대에 조직될 무렵 다른 대학에는 민민투만 있었다. 자민투는 다른 대학에 조직을 심기 위한 선전작업을 벌였고 여름방학이 지나자 많은 대학이 자민투 노선으로 전환되었다. 구학련이 결성되고 세력을 넓혀나가자 학생운동권에는 기존의 전학련-삼민투 계열과 구학련-자민투 계열로 두 개의 대오가 각축하게 된다. 단순히 이념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시비를 걸고 다투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다(서중석 2011, 210).

25 구학련-자민투 계열 학생운동권은 1986년 가을 즈음에는 NL(National Liberation의 이니셜)계열이라고 불렀고 전학련-민민투계열은 CA(Constitutional Association의 이니셜)계열이라고 불렀다.

거에서도 재현되었다. 이들 학교에서도 NL계 학생운동권이 총학생회장으로 대거 당선된 것이다(Ibid., 224).

한편, 이처럼 사회운동세력의 이념적 수위가 온건화되면서 민국련사건과 5.3인천사건으로 소원해진 야당과 사회운동세력 사이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1986년 9월 2일 5.3인천대회 이후 처음으로 신민당과 재야대표가 모여 개헌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가 끝난 뒤 사회운동세력의 박형규 목사는 5.3 인천항쟁 이후 신민당과 재야 간에 빚었던 갈등이 해소되고 강한 연대감이 회복되었다고 발표했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365). 그리고 1986년 11월 29일 야당과 사회운동세력은 ‘영구집권음모 분쇄와 직선제 개헌’을 목표로 한 서울대회를 개최하게 된다(최현·김지영 2007, 269-70).

그런데 신민당의 서울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에 의해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 대회는 야당과 사회운동권의 연대, ‘직선제개헌’이라는 선명한 목표를 전면에 내걸었다는 점에서 87년 6.10대회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이 대회는 대중적인 외면을 받고 신민당은 개헌대회 자진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윤상철 1997, 139). 정권의 탄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디까지나 ‘상수’에 가깝다. 그렇다면 1986년 가을 신민당의 개헌추진 서울대회가 무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그 원인으로 당시 정치사회가 열려있었던 상황에 주목한다. 말하자면 헌법특위는 계속 가동 중이었고 민정당은 ‘내각제’ 개헌안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민주적’ 개헌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권이 ‘호헌’ 아니라 ‘내각제’로의 ‘개헌’을 보장하고 있었고 미국도 ‘내각제’를 지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외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야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권력욕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당시 일반대중들은 내각제와 직선제 가운데 어떤 형태를 더 지지하고 있었을까? 본 연구는 당시 대중들이 헌법개정의 필요성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으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추측한다. 내각제보다 대통령 직선제가 국민들에게 좀더 친숙하다고 판단했기에 민정당이 내각제와 직선제에 대한 선택적 국민투표안에 반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대중이 내각제에 비해 대통령직선제를 확연히 더 많이 지지했다는 증거도 많지 않다. 오히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 시국선언문을 보면 1986년과 1987년 공히 호헌에 대해 비판적이고 개헌을 지지하고 있지만 직선제로 개헌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4.13 ‘호헌’조치가 아니라 4.13 ‘내각제개헌’조치를 시행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2) 2차 대중동원기: 4.13호헌조치와 시국선언정국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헌’조치로 개헌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1985년 2.12총선에서 신민당이 ‘직선제개헌’을 공약으로 내건 이후 전두환정권은 지속적으로 ‘호헌론’을 견지하다가 1986년 4월 개헌운동에 밀려 ‘개헌론’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이후 개헌논의는 급진전하여 개헌을 전제한 상태에서

직선제 개헌이나, 내각제 개헌이나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987년 4월 다시 호헌조치가 취해 지자 1986년 이래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개헌론마저 부정한 셈이 되어 버렸다.

호헌조치가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또 호헌조치가 정권의 자신감의 발로였 건 아니면 불가피한 선택이었건 간에<sup>26</sup> 호헌조치가 실제로 취해졌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난 박 탈감으로 다가왔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호헌조치는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저항을 발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두환정권 최대의 '실수'가 되었다.

4.13 호헌조치 이후 사회전반적인 이반현상이 시작되었다. 특히 86년의 1차 대중동원기가 신민당의 개헌서명운동, 개헌현판식집회 등 신민당이 펼쳐놓은 장에 대중들이 참여하는 형태였다면 87년 호헌조 치 이후의 상황은 대중들의 자발적 대중동원의 형태를 띠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4.13 호헌조치가 있던 날 가장 먼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 빠르게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그 다음날에는 민통련을 비롯한 사회운동조직들과 KNCC 같은 종교계의 반박성명서가 뒤따랐다. 4월 21일부터 광주교구 신부를 시작으로 종교계의 단식행렬이 이어졌고 4월 22일에는 고려대 교수를 시작으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 다. 이러한 시국선언열기는 5월 이후 예술인, 약사, 의사, 치과의사, 기자와 같은 시민사회내의 각계각층 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이른바 '시국선언정국'은 1986년의 '시국선언'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서도 보다 더 확대된 형태로 좀더 빠른 템포로 전개되었다.<sup>27</sup> 또한 학계, 종교계 이외에도 시민사회 내의 새로운 층위에서도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다(〈표 4-3〉 참조).

〈표 4-3〉 1987년 4.13 호헌조치 이후 시국성명서 발표 단체(개인포함)

날짜	단체	날짜	단체	날짜	단체
4.13	대한변협	4.14	민통련, NCC, 목협, 인권위원회	4.16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4.17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자유수호대 책협의회	4.18	문화 6단체	4.21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및 전국 23개지역 인권선교위원회, 민 가협
4.22	고대교수 30명, 한국여성단체연합	4.24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4.2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 위원회
4.27	민주헌정연구회	4.28	광주카톨릭대 16명	4.29	서강대교수 28명, 원주교구사제단 과정의평화위원회, 강원민통련, 원 주교구평협, 청년연합회, 교리교사

26 1987년 전두환은 연두기자회견 중 [개헌논의에 대해]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대결단 불가피”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현행 헌법을 지속시킨다는 것을 전제하는 여당의 2월 조기 지구당개편대화설 등이 제기되기도 하면서 ‘호헌’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체크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기사연 1987, 5). 또한 전국적 규모로 계획되고 수행되었던 2.7 추모대회와 3.3평화대행진이 경찰의 봉쇄로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대비되는 대학가의 조용한 분위기로 인해 정권은 경찰의 물리력으로 저항세력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윤상철 1997: 124). 게다가 김영삼,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협세력의 탈당과 신당 창당은 직선제 개헌을 제외한 어떠한 타협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권으로서는 호헌조치에 대한 충분한 변명거리를 확보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정대화 1995, 95). 실제 전두환정권은 호헌조치를 취하게 된 가장 직접적 원인을 양김의 탈당으로 인해 국회 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된 상황에 돌리고 있다. 전두환의 호헌조치가 사전에 예고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매우 놀랍고도 충격적인 것이었음은 틀림없다.

27 예컨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의 경우 86년의 서명교수들은 대부분 87년에도 참여했다. 또한 86년에는 29개 대학 782명이 참가한데 비해 87년에는 50여개 대학 1530명에 이르렀다. 86년에 이어 87년에도 성명서를 발표했던 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서명자가 늘어났으며 시국선언의 확산속도 또한 86년에 비해 훨씬 빨라졌다(기사연 1987, 16).

날짜	단체	날짜	단체	날짜	단체
					연합회, 농민회, <b>문학인 193인</b> ,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 광주신부들
4.30	카톨릭대 교수 16명, 성대교수 43명, 천주교안동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평위, 카농, 수녀연합회, 대학생연합회, 고대8개과대학원생, 울산성직자 25명	5.1	서울대교수 122명, 인천교구청년회, 가톨릭대학연합회, 가톨릭노동청년회 공동 성명발표, 정치범동지회	5.2	천주교원주교구평협, 가농원주교구연합회의
5.4	외대교수 33명, 전남대교수 60명, 한신대교수 42명, 강원대교수 40명, 가톨릭부산교구 사제단	5.5	충남민협	5.6	중앙대교수 55명, 국민대교수 23명, 시립대교수 17명, 경기대교수 20명, 전북대교수 50명, 인하대교수 28명, <b>연극인 18명</b>
5.7	경북대 교수 57명, 계명대교수 56명, 원광대교수 45명, 전주대교수 19명, 덕성여대교수 14명, 충남지역 목회자 197명, 전북대교수 50명, 해직교사 58명	5.8	부산대교수 40명, 경남대교수 35명, 동국대교수 14명, 영남대교수 65명, 성심여대교수 28명, 강릉대교수 11명, 대구·경북지역 목회자, 금융노련 노동자, 대구경북지역 목회자 51명, <b>미술인 202명</b> , 예장목회자협의회 소속 목사 50명, 서울대 대학원생 1,820명, 인천지역선교위원회 350명	5.9	연세대교수 40명, 건국대교수 22명, 송실대교수 21명, 울산대교수 35명, 목포대교수 20명, 대전기청협
5.10	전국원불교대학생연합회	5.11	경희대교수 22명, 단국대교수 24명, <b>영화인 97명</b>	5.12	총북대교수 36명, 청주대교수 29명, 청주사범대교수 15명, 경상대교수 38명, 한남대교수 24명, 동아대교수 12명, 감리교신학대교수 12명, 연대대학원생 879명, 6개 교단목사 신부 등 성직자와 신도 등 1200여명
5.13	한국방송대교수 18명, 부산여대교수 14명, 경원대교수 10명	5.14	부산산업대교수31명, 대전대교수 12명	5.15	<b>연극인 105명</b> , 기독교대한감리회, <b>미술인33명</b>
5.16	조계종 승려 751명, 흥사단회원 120명	5.18	이대교수17명	5.19	순천대교수 21명
5.20	중앙승가대학 스님 170명, 정토구현전국승가회, 민중불교운동연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5.21	광주사암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 한국대불연 전남지부, 나주사암연합회, 출판인 359명	5.23	한양대교수 42명, <b>작곡가 6명</b>
5.25	광주기독교 11개교단 17개 노회 대표들, <b>동아일보 기자 132명</b>	5.26	대한성공회 전국사제단 대표 50여명과 신도 5백여명	5.27	전국비구니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5.28	<b>대구지역 공연 예술인 41명</b> , 김천직지사 동화사 스님, 경북 금릉 직지사 승가대학 학승 75명	5.29	<b>8504작곡동인, 한국일보 기자 140명</b> , 강화지역교회협의회소속 성직자 82명과 신도 150명, <b>부산치과 의사 16명</b>	5.30	창원대교수13명
6.1	<b>부산경남약사 37명</b>	6.3	구세군 청년단체 150명	6.4	<b>서울경기지역 치과의사 66명</b>
6.5	<b>부산일보기자, 광주지역 미술인 51명, 연예인 88명</b>	6.8	전북지역 현직교사17명, <b>광주전남 지역 문화예술인 124명</b> , <b>서울경기전북지역 의사 137명</b> , 이대졸업생 1274명	6.9	<b>부산변호사 24명</b> , 경북대대학원생 193명, <b>대구지방변호사회소속변호사 24명</b> , <b>광주유도회 회원 89명</b> , 태고종천태종 등 한국불교종교계14개 종단

날짜	단체	날짜	단체	날짜	단체
6.11	광주전남지역 약사 51명, 예장대전 교역자 230명, 전주변호사회 16명	6.13	광주 공인중개사 28명, 광주변호사 26명, 한국장로협의회	6.14	하버드대 한인 66명
6.15	천주교서울대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	6.16	기장총회	6.17	대전변호사 20명
6.18	익산 원불교 239인	6.19	수원변호사 24인	6.20	서울지역 51개 중등현직교사 105명
6.21	강원지역 초중고교사 32명, 종로·제기동 지역 한의사 27명	6.22	제주대학교창훈교수, 서울인천지역 간호사 463명	6.24	인천지역 변호사 17명, 전현직의원 71명
6.25	서독집권기민당의 하이너 가이슬러 사무총장	6.26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6.27	천도교 중앙총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유지회원 일동
6.29	충남중등현직교사 34명				

\*출처: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7), 네이버 옛날신문 등 참고하여 정리

\*\*굵은 글씨는 변호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기자, 예술인 등 종교계, 학계(교수, 교사), 정치, 사회운동단체를 제외한 각계 각층을 표시한 것임

종교계의 경우에는 서명, 성명서 발표와 동시에 단식이라는 좀더 강화된 레퍼토리를 꺼내들었다(〈표 4-4〉 참조). 4월 21일 광주대교구 신부들의 단식을 시작으로 각 교구 신부들의 동조단식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단식행위는 신부들의 단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에 공감한 신도들의 동조단식을 불러일으켰다(기사연 1987, 14). 이러한 단식행위는 주로 젊은 신부들 위주였지만, 일련의 과정 속에서 평소 현실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신부들까지도 참여하는 형태로 나아갔다. 또한 개인적 참여의 확대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예장고신과 같은 보수교단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조직적 참여의 확대로 이어졌다(기사연 1988, 12).

〈표 4-4〉 1987년 4.13 호헌조치 이후 단식농성 벌인 단체(개인포함)

날짜	단체
4.21	광주교구사제단12인
4.24	전주교구사제단 18명, 전주교도소 수감중이던 강희남목사, 한국기장 전남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 20여명
4.27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40명, 전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소속 27명, 광주대교구수녀연합회소속 수녀 80명
4.28	제3세대당25명
4.29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단17명, 천주교원주교구사제단20여명
4.30	인천교구사제 39명
5.1	가톨릭부산교구신부28명, 원주교구 수녀21명, 춘천신부 15명
5.3	가톨릭부산교구 수녀협의회소속 수녀250여명, 천주교안동교구 수녀연합회 소속 수녀 56명
5.4	천주교마산교구 소속 신부14명, 천주교대구교구사제단20여명(개별적으로),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소속 목회자들, 천주교 대전교구 사제단 소속 신부30여명, 이기택의원, 전고대학교수 김용욱
5.6	KNCC춘천인권선교위 소속 목회자 8인, 수원신부 38명
5.7	가톨릭농민회 거창협의회 회원들, 충남지역 목회자 32명
5.8	대구·경북지역 목회자 7명, 사회민주당 충남제2지구당 안은찬 위원장
5.13	기장 총북노회 목회자들 23명
5.15	민주헌정연구회 회원 80여명

날짜	단체
5.18	남원지역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29명, 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12명
5.19	포항기독교청년협의회회원19명, 예장 총청노회와 총북노회 목회자 45명
5.20	중앙승가대학 스님 59명
5.21	영천군신령면신령천주교회 박상호신부, 광주사암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 한국대불연 전남지부 소속 3명의 스님
5.25	태백지역 목사17명
5.26	청도 운문사 승려 200여명, 해인사승려 53명
5.27	계룡사 동학사 학생114명
5.28	7개신학대학 학생회장 7명
6.1	대불련 대구경북지역간부 5명, 고대, 연대, 이대, 서강대 등 서학협 소속 13개대 총학생회장, 학생회간부 20여명

\*출처: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2007), 네이버 옛날신문 등 참고하여 정리

이러한 각계각층에 의한 시국선언정국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첫째, 시국선언정국은 일반 대중들의 자체 동원력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4.13 호헌조치가 있고 나서 가장 먼저 반박성명서를 발표한 단체가 민통련과 같은 사회운동단체가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변협)였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성명서보다 좀더 강도높은 행동인 단식의 경우에도 광주대교구의 신부 12명이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이들 대다수는 단식경험이 전무한 일종의 신참자들이었다.

반면 이 시기 신민당 탈당파가 창당한 통일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 갓 창당한 신생정당으로서 정당조직화 작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던 중 일명 ‘용팔이사건’을 겪게 된 것이다. ‘용팔이사건’이란 용역깡패들이 지구당 창당대회가 열리는 장소마다 따라다니며 4월 말까지 창당대회를 개최한 57개 지구당 중 20여군데를 습격, 대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건을 말한다(김영삼 2015, 334).<sup>28</sup> 갓 창당한 신생정당인데다 이처럼 고초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시기 민주당은 주로 첫 임시국회에 4.13조치 무효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원내의 제도정치 틀 안에 머물러 있었다(윤상철 1997, 127).

한편, 민주화운동단체들 역시 호헌조치에 즉각 대응했다. 4.13 호헌조치가 있고 난 다음날, 민통련을 비롯한 사회운동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재야인사 28인에서 시작되어 사회운동조직 18개 단체의 435명이 릴레이식으로 공동농성투쟁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사회운동 단체들의 참여가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운동조직들의 움직임은 여러 무수한 사례들 가운데 하나 정도의 의미밖에 지니지 못했다.

둘째, 호헌조치와 시국선언정국은 ‘호헌철폐’ 내지는 개헌프레임의 대중동원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당시 제출된 성명서를 보면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편차가 있지만 호헌철폐에 대해서는 일치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변협, 교수집단, 각계인사들 등 대다수의 성명서는 호헌철폐 이외의 내용을 아예 담고 있지 않다. 종교계의 경우 호헌철폐와 함께 개헌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직선제

28 이 사건은 당시에는 경찰수사에서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으나 1993년 신민당의원 및 안기부 등이 개입한 정치공작이었음이 드러났다(김영삼 2015, 334-335).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 밖에 소수의 성명서에서만 정권퇴진, 인권문제, 언론기본법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월간조선 1987/05; 1987/06).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만일 ‘호헌’이 아니라 ‘내각제’ 개헌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조치가 취해졌다면 상황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1987년 4.13 호헌조치의 가장 큰 실수는 정권이 개헌프레임의 대중성을 간과했다는 점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조직들이 시국선언정국에서 참여자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시국선언정국의 한계와 더불어 6.10민주항쟁 발생을 위해서는 사회운동조직의 역할이 남아 있었음을 보여준다. 시국선언정국은 반정부세력의 광범위한 존재를 드러낼 수는 있었지만 고립,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시국선언정국은 결코 ‘4월항쟁’이 될 수 없었다. 자발적 대중저항을 하나로 묶어줄 전국적인 지도부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 3) 2차 대중동원기III: 국본의 결성과 6.10민주항쟁

4월의 시국선언정국은 5월로 이어졌다. 그러나 5월중순까지도 여전히 성명서 발표와 단식행렬 등 분산적 대중저항을 벗어나지 않았다. 전두환 정권은 이러한 시국선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호헌조치를 철회할 의사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별다른 계기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국선언정국은 청원운동의 형태로 머물다가 그대로 가라앉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박종철의 죽음이 은폐, 조작되었다는 사제단의 폭로가 발생했다. ‘박종철사건’은 1987년 1월 서울대 언어학과 2학년 학생이었던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에 의해 죽임을 당했음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언론에 의해 밝혀진 사건이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a).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중적 공분이 형성되자 1986년 5.3인천대회 이후 지속되어 오던 정권의 탄압이 다소 완화되었다. 사회운동단체들은 ‘고박종철군 국민추도회준비위원회’(이하 추도준비위)를 발족하면서 어느 정도 수세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추도준비위가 준비했던 2.7국민추도회와 49재 날에 계획된 3.3평화대행진이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무산되자 이 사건은 앞서 벌어졌던 ‘김근태고문사건’이나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마찬가지로 여러 고문사건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다(윤상철, 1997; 서중석 2011).

그러나 호헌조치로 인한 시국선언정국이 지속되고 있던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박종철사건이 은폐, 축소되었음을 폭로하였고 언론에 의해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박종철사건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김정남 2007, 77~89).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전두환 정권은 5월 26일의 문책개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국무총리에 노신영이 물러나고 이한기가 임명되었으며 안기부장은 장세동이 물러나고 국세청장이었던 안무혁이 임명되었다. 내무장관에 고건 민정당 의원, 법무장관에는 정해창 대검차장 등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자리가 거의 다 바뀌었다(서중석 2011, 250). 서중석은 전두환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을 장세동의 퇴진이 상징하는 이 개각으로 권력의 핵심이 모두 온건파들로 바뀐으로써 이후 6.10민주항쟁에 대한 정권의 대응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Ibid., 251).

폭로사건이 있고 나서 사회운동조직들은 추도준비위를 발전시켜 5월 23일 ‘박종철군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단체를 발족하고 6월 10일 전국에서 동시에 조작규탄범국민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움직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권의 호헌조치에 대응하는 연대조직결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그 결과로 국본이 결성되었다는 점이다. 사회운동조직들의 연대조직 건설 논의는 4월의 시국선언정국 때부터 진행되고는 있었다. 그러나 논의수렴과정에서 내부적 이견이 해소되지 못하여 조직화작업이 지체되고 있었다(황인성 1997, 41).<sup>29</sup> 그러다가 5월 18일 박종철고문치사 조작폭로사건이 발생하자 사회운동조직과 야당 모두 연대조직건설에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특히 1986년 ‘민국련’ 경험 등 야당과의 공조경험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념적 온건화를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게 된 민통련이 정치권과 사회운동권 사이에서 조율하는 작업을 맡았다.<sup>30</sup>

그리고 드디어 1987년 5월 27일, 민통련, 개신교, 가톨릭, 불교, 여성, 그리고 민주협과 신생 통일민주당은 명동의 향린교회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를 결성하게 된다. 국본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반군부독재전선’(최장집 1989), ‘해방이후 최대규모의 범민주연합전선’적 조직(이재화 1989: 144), 최대의 ‘도전연합’(윤상철 1997), ‘최대민주화연합’(정해구 외 2004), ‘민주대연합’(정대화 2005) 등의 평가가 있는 만큼 실제로 기존 반독재민주화운동세력의 총결집체였다. 1987년의 전국적인 대중적 정치투쟁이 왜 6월에 발생했는가 하는 점은 6.10민주항쟁의 전국적 지도부로 기여한 국본이 5월 말에 결성되었고, 그 첫 번째 전국적 집회를 6월 10일로 설정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국본의 결성으로 6.10민주항쟁은 사실상 ‘현실화’될 수 있었다.

국본은 정치세력과 사회운동세력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체라는 점에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연대기구라고 할 수 있다. 국본 내에서 이 두 세력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개헌’프레임의 주창자로서 전국적인 상징성을 담당했다면 사회운동세력은 전국조직망과 국민대회 개최를 통한 저항의 조직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표 4-5〉 참조).

〈표 4-5〉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지역·부문 조직결성과정(~1987.6)

날짜	단체
1987.5.15	충북본부(충북지역 장기집권 호헌책동 분쇄 투쟁위원회)
5.18	전남본부
5.20	부산본부
5.21	대구경북본부
5.21	전북본부

29 종교계의 개신교측은 재야운동의 순수성 유지 차원에서 야당과는 한 조직틀안에 포괄하기보다 협력관계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황인성 1997, 41). 반면 민주당의 경우 5월 1일 신생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듯 ‘재야와의 협력, 연대관계는 계속 유지하되, 공동기구 같은 것은 만들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동아일보 198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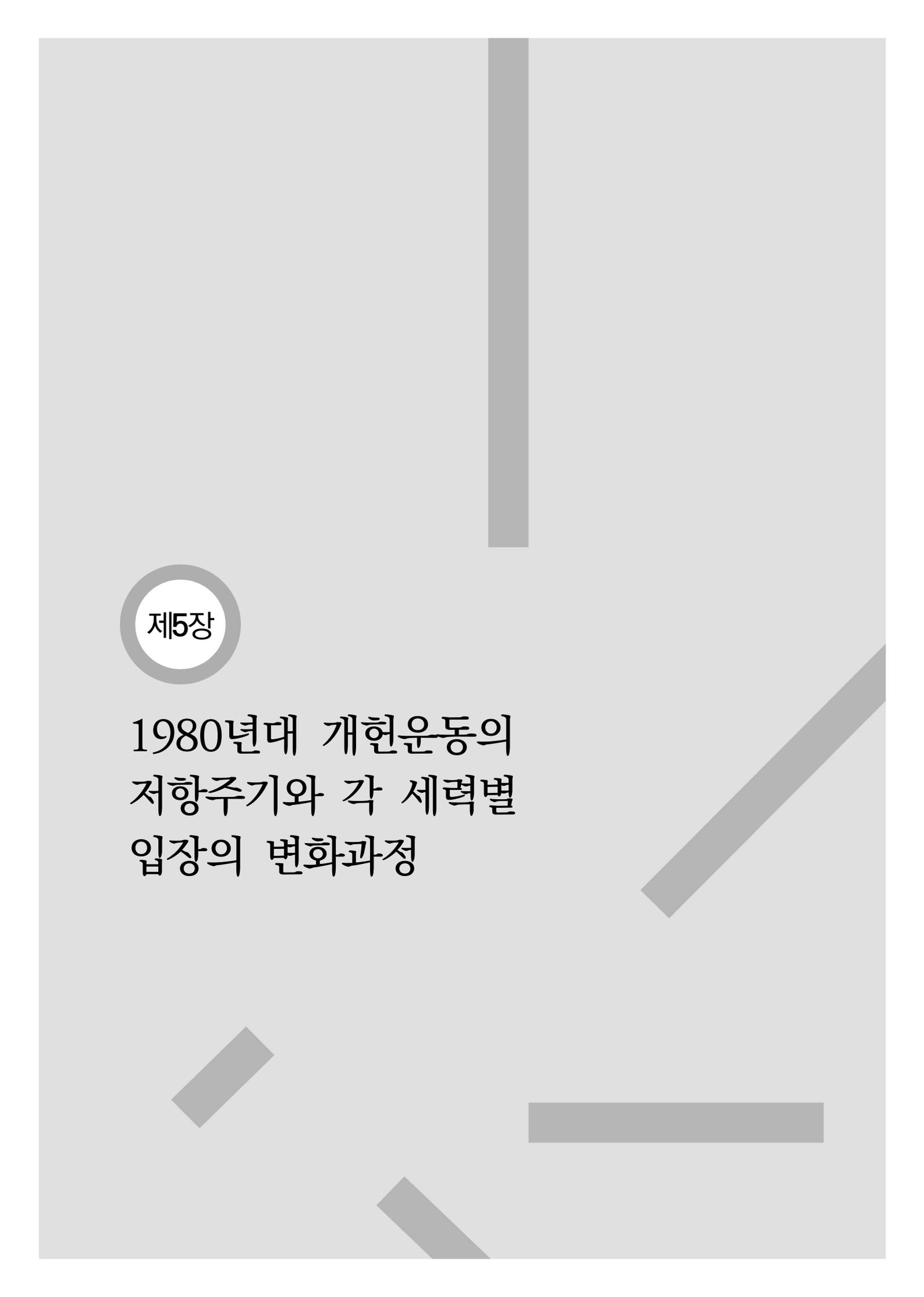
30 먼저 전략을 바꾼 것은 사회운동조직들이었다. 몇 차례에 걸친 협의와 조율을 거친 이후 결국 호헌조치 이후 민주당과의 연대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한 가톨릭측의 결단으로 야당을 포괄하는 연대조직결성에 합의하게 된다(신동아 1987/7, 207). 그러나 정부, 여당과의 협상여지를 남겨두고자 했던 제도권 야당의 지연으로 국본의 ‘공식적’인 발족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야당과의 연대를 ‘지향’하고 있었던 국본의 주체세력은 전국본부의 공식적 출범을 연기시켜가면서까지 야당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윤상철 1997a, 151).

날짜	단체
5.28	충남본부
6.4	강원본부
6.8	문화인공동위원회
6.10	경남본부
6.10	군산, 옥구지부
6월 초순	울산지부
6.11	이한열군 등 독가스탄 희생자 대책위원회
6.14	미동부지역본부
6.16	국민운동불교공동위원회
6.22	이리, 익산지부
6.22	경기도 민주헌법쟁취협의회(유사조직)
6.26	포항, 영일지부
6월 중순	태백시지부
6.29	정선군지부

\*출처: 민족민주운동연구소(1989a)

국본은 6.10민주항쟁의 실질적인 지도부로 기능했다. 국본이 주관한 6.10 대회와 6.18최루탄추방대회 및 6.26 평화대행진은 6.10민주항쟁의 전 기간 중 동원의 수준이 가장 높았다. 슬로건의 경우도 ‘호헌철폐, 독재타도’는 물론 ‘민주헌법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더 이상 못 속겠다 거짓정권 물러가라’, ‘동장에서 대통령까지 내 손으로’ 등 국본이 일관되게 제시했던 슬로건들이 참여자들에 의해 활용되었다(기사연 1987b, 78). 또한 국본이 제안했던 ‘국민행동요령’, 예컨대 오후 6시 국기하강식과 동시에 애국가 제창, 태극기나 손수건을 흔들며 집결장소에 모이기, 교회와 사찰은 타종, 차량은 경적, 오후 9시에 TV끄고 소등 등과 같은 요령은 많은 시민들에 의해 지켜졌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b). 또한 보다 많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안됐던 비폭력, 평화적 집회 역시 대체로 준수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국본에 의한 조직적 동원을 과장할 수는 없다. 6월항쟁은 10일 이후 26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전개되었다. 전국본부가 결성되었다고는 해도 급조된 조직으로서 슬로건의 통일, 몇 가지 행동강령, 이러한 내용을 각 지역에 통보하는 정도의 지도만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기사연 1987b, 99). 그런 의미에서 국본의 조직적 힘 못지않게 개헌프레임의 대중동원력, 그리고 그로 인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동원 역시 6월항쟁의 숨은 ‘공로자’ 임에 틀림없다(윤상철 1997, 156-7). 국본이 조직적으로 더 완성되었던 6.29선언 이후에는 오히려 그 이전만큼 대중동원에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 역시 6.10민주항쟁을 이끌었던 것은 조직만큼이나 개헌프레임의 힘이 컸음을 암시한다.



제5장

1980년대 개헌운동의  
저항주기와 각 세력별  
입장의 변화과정





# 1980년대 개헌운동의 저항주기와 각 세력별 입장의 변화과정

앞에서 1980년대 개헌운동의 전개과정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각 세력별로 개헌에 대한 입장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적하고 그것이 개헌운동의 저항주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의 개헌프레임이 어떻게 사회운동세력에게 정치적 기회구조로서 작동하는지 또 사회운동세력의 개헌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대중동원을 촉진하거나 방해하게 되는지를 좀더 분명하게 보여줄 것으로 판단된다.

## 1 ■ 각 세력별 개헌프레임의 변화

### 1) 야당(민추협-신민당-민주당)의 입장: 직선제 개헌론 고수

신민당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민추협과 신민당의 주류세력은 개헌프레임을 가장 처음으로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직선제 개헌론을 고수함으로써 개헌프레임의 주창자로서 위상을 갖는다. 신민당은 1985년 총선때 총선공약으로 처음 ‘직선제 개헌’을 제기했다. 이후 1985년 8월의 전당대회에서 직선제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후 양김과 민추협계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직선제 개헌 입장을 고수해 나갔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몇몇 연구들이 주장하듯(예를 들면 강원택 2015) 2.12 총선때 신민당 내에 이미 ‘직선제개헌프레임’에 대한 합의가 확고하게 이루어졌었던 것은 아니다.<sup>31</sup> 신민당이 직선제 개헌 당론을 일관되게 끌고 가는 데에 장애가 없지는 않았다. 그것은 개헌 그 자체보다는 그 내용으로서 내각제와 직선제 개헌을 둘러싼 당내갈등, 분열로 나타났다. 그 첫 번째 당내갈등은 1985년 말 신민당 내의 민추협계와 비민추협계 간에 발생하여 결국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신보수회’의 집단탈당으로 이어졌다(이

31 심지어 김영삼과 김대중 사이에서도 직선제와 내각제에 대한 이견이 불거지곤 했다(기사연 1986, 23; 경향신문 1986/11/14; 김대중 2015, 459).

계획 1992, 312). 두 번째 당내갈등은 1986년 12월 24일 이민우 신민당 총재가 '선민주화 후 내각제 협상'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이민우 구상'을 발표하면서 비롯된다. 이민우 구상으로 시작된 당내갈등은 결국 분당으로까지 이어지고 1987년 4월 8일 양김의 민주협계를 중심으로 한 통일민주당 창당선언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당내분란에도 불구하고 신민당-민주당의 주류세력은 상대적으로 선명한 '직선제 개헌' 프레임을 밀고 나감으로써 개헌운동 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이 프레임의 '주창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 2) 정부와 여당의 입장: 호헌론에서 개헌론으로, 다시 호헌론으로

전두환정권과 여당인 민주정의당(이하 민정당)의 입장은 시기별로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1985년 총선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대화를 열어둔 호헌론'의 입장을 취한다(동아일보 1985/3/14). 그런데 '대화는 하겠으나 호헌'이라는 이 입장은 1986년 1월 전두환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개헌은 임기가 끝나고 88올림픽도 마친 89년에나 논의가능하며 지금은 '대화도 할 수 없다'는 '강경호헌론'으로 바뀌게 된다(경향신문 1986/1/16).

이러한 '강경호헌론'이 거대한 대중적 저항에 부딪치게 되자 전두환정권은 1986년 2월 24일 '89년 개헌론'으로, 그리고 4월 30일에는 '임기내 개헌론'으로까지 후퇴하게 된다. 이후 민정당은 곧 개헌안 마련작업에 착수하면서 내각제 개헌론이라는 개헌입장에 안착하게 된다(김성의 1992, 131~139). 결국 1986년 가을까지의 상황만 놓고 볼 때 정부와 여당은 1986년 초 '강경호헌론'에서 '89년 개헌론'으로 다시 '임기내 개헌론'으로 프레임 변형을 이루었고 '내각제 개헌론'을 제안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헌세력'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두환정권은 1987년 4월 다시 호헌론으로 회귀하였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개헌프레임의 틀 외부로 이탈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대중적 저항을 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두환정권 최대의 '실수'가 되었다.

## 3) 사회운동세력의 입장: '민주헌법제정론'에서 '직선제 수용'으로

사회운동세력의 경우 광주항쟁 이래로 이념적 급진화를 겪고 있었다. 이들에게 5공화국 헌법을 고치는 수준의 요구는 실현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신군부세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따라서 개량주의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개헌프레임이 대중의 강한 지지를 얻고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게 된다.

개헌에 대한 사회운동단체들의 초기 입장은 야당의 '직선제 개헌'론에 상당히 비판적이었으며 그것을 급진화시키려고 시도한다. 민통련의 경우 '군사독재퇴진→민주헌법제정→민주정부수립'을 운동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헌법제정 이전에 정권퇴진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단체나 학생운동권의 입장

은 이보다도 더 급진적이어서 ‘헌법제정 민중의회의 소집’, 혹은 ‘삼민헌법쟁취론’ 등 헌법 ‘개정’이 아니라 민중이 주체가 되는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에서 새롭게 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운동세력의 입장은 그러나 1986년 5.3 인천민중대회에서의 ‘패배’와 이후의 장기 수세기를 거치면서 수정되었다. 민통련의 경우 1986년 하반기에 정권퇴진의 목표를 폐기하고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저지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으며 사실상 민주협과 신민당 주류세력의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하게 된다. 학생운동권 가운데 NL계열의 경우에도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고 신민당에 ‘범국민운동연합’ 결성을 제안하였으며 비폭력노선을 강조하고 상설적인 반합법투쟁위원회 대신 학생회 중심의 학생운동을 강조하기에 이른다(서중석 2011, 219). 이들은 1986년 가을과 1987년 봄의 대학내 학생회장 선거에서 승리하여 학생운동의 주류세력으로 떠오르게 된다.

#### 4) 신중간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입장: 개헌론 지지

마지막으로 당시 개헌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입장을 살펴보자. 흥미롭게도 개헌운동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시국선언문의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물론 이때 시민은 교수, 종교인, 교사, 기자, 의사, 약사, 예술인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른바 ‘신중간계층’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이들 신중간층은 엄혹한 정치상황에서 용기있게 공개발언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을 주도한 집단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1960년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의 결과물이기도 한 이들 신중간계층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면 이미 하나의 집단을 형성할 정도로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다(서관모 1987). 신중간계층의 이념성향에 대해서는 1987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현실안주하는 보수주의자로 보는 입장도 있었지만(진덕규 1987; 최재현 1987; 임현진 1987), 온건한 개혁주의자로서 군부정권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한완상 1987; 한상진 1987). 그리고 개헌정국에서 공개적으로 표명된 입장을 통해 추측해 볼 때 당시 신중간층은 대체로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온건한 개혁주의자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개헌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1986년 3-4월의 시국선언정국과 1987년 4-5월의 시국선언정국에서 제출된 시국선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86년 3-4월 시국선언정국을 이끌었던 교수들의 선언문을 보면 ‘민주화의 핵심은 개헌’이며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가질 자유가 있다’, ‘개헌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헌을 지지하는 입장을 담고 있다(동아일보 1986/4/12). 1987년 4월의 경우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대체로 4.13 호헌 철폐에 대한 일치된 요구를 담고 있다. 변협, 교수집단, 각계인사들 등 대다수의 성명서에는 호헌을 철폐하고 개헌논의를 즉각 개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계의 경우 호헌철폐와 함께 개헌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직선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 밖에 소수의 성명서에서는 정권퇴진, 인권문제, 언론기본법 문제 등이 거론되었다(월간조선 1987/05; 1987/06).<sup>32</sup>

32 1987년 4.13 호헌조치를 지지하는 의견도 표명되었다. 그중에는 경제인, 종교인, 문인, 변호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경향신문 1987/4/13). 그러나 호헌조치 지지를 표명한 의견은 호헌조치철폐를 표명한 의견에 비하면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1986년 가을이 되면 정부와 여당 역시 내각제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개헌세력’이 되었기 때문에 내각제와 직선제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당시 제출된 시국선언문을 보면 1986년과 1987년 공히 호헌론 비판, 개헌론 지지의 입장이지만 절대다수가 특정한 형태의 개헌론을 요구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두환정권은 내각제와 직선제에 대한 선택적 국민투표안에 반대하고 궁극적으로 내각제보다 후퇴한 호헌론으로 회귀한 바 있다. 전두환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겠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정부, 여당의 성급한 판단이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어쩌면 4.13 ‘호헌’조치가 아니라 4.13 ‘내각제개헌’조치를 시행했다더라면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2 ■ 개헌운동의 저항주기

그렇다면 각 세력별 개헌프레임의 변화는 어떻게 대중동원을 촉진하거나 저지하면서 개헌운동의 저항주기를 형성해 나가게 될까? 1980년대 개헌운동의 저항주기는 개헌프레임이 처음 제기된 총선을 별도로 할 때 크게 두 번의 대중동원기와 두 번의 소강기를 거쳤다. 다음에서는 각 세력들의 입장이 실제 저항주기 속에서 어떤 식으로 현현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1차 소강기: 1985년 2월~1986년 1월

1985년 12대 총선 이후 이듬해 1월까지 개헌논의의 장은 국회였다. 개헌운동에서 볼 때 1차 소강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정부와 여당은 ‘대화를 열어둔 호헌론’ 입장에 서면서도 ‘모든 정치의 장내로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동아일보 1985/5/3). 이제 갓 원내에 진입한 신생야당 신민당 역시 원외투쟁에 돌입할 명분이 부족하였고 따라서 주로 국회에 머물면서 개헌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그런데 민정당이 이 시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호헌론’을 고수했기 때문에 신민당의 개헌시도나 헌법특위 구성시도가 국회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신민당은 정당내부적으로 직선제 개헌론과 내각제 개헌론을 둘러싸고 갈등도 빚었고 그 결과로 ‘신보수회’가 집단탈당하는 사태도 겪었다. 민정당은 시간을 벌었지만 신민당으로서는 별반 소득없는 1년을 보낸 셈이 되었다.

개헌을 둘러싼 대중동원이 부재했던 이 시기 동안 사회운동세력은 본격적으로 개헌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사회운동세력의 입장은 주로 야당의 직선제 개헌론과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좀더 급진적인 프레임으로 개헌프레임에 대한 ‘프레임 변형’을 시도한다. 그것은 앞서도 언급했듯 1980년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이념적 급진화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적

흐름 속에서 사회운동세력은 '선 정권퇴진, 후 민주헌법제정론', 혹은 민중중심의 '삼민헌법제정'과 같은 보다 급진적인 프레임을 제시해 나갔다.

## 2) 1차 대중동원기: 1986년 1월~1986년 5월

1차 대중동원기는 1986년 1월 전두환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강경호헌론으로 선회하고 신민당이 원외투쟁을 선포하면서 시작된다. 1차대중동원기의 특징은 신민당이 주도적으로 대중동원을 시도하고 시민사회가 이에 가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986년 2월부터 시작된 신민당의 개헌서명운동, 개헌현판식집회, 사회운동세력의 민중대회, 그리고 교수들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국선언의 결과 전두환정권은 결국 호헌론에서 개헌론으로 한 발 물러서게 된다.

전두환정권의 후퇴에도 신민당과 사회운동세력은 계속해서 대중동원을 시도했으나 1차대중동원기는 결국 종결되는데 사회운동세력의 이념적 급진화가 진전되면서 제도권 야당과 분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결정적 계기는 1986년 5월 3일 인천 민중대회 사건이다. 신민당의 인천현판식 집회와 병행하여 치러진 인천민중대회는 학생과 경찰 간의 폭력투쟁으로 비화되면서 사회운동세력들 간의 사전조율의 부재, 지나치게 급진적 슬로건으로 인한 고립 등으로 사실상 '패배'로 막을 내리고 만다. 사회운동세력과 야당의 분열로 인해 대중동원은 약화, 소멸된다.

정부와 여당이 호헌론에서 개헌론으로 한발 후퇴했다는 점에서 1차대중동원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5.3인천대회로 인해 여론이 냉담하게 바뀌면서 대중동원이 사그라들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 된다.

## 3) 2차 소강기: 1986년 5월~1987년 4월

2차 소강기는 1986년 5월부터 1987년 4.13호헌조치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사회적 분위기가 가라앉자 신민당은 원외투쟁을 접고 원내합의개헌을 모색하게 된다. 무대의 중심은 다시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호헌론에서 임기내 개헌론으로 입장을 변경한 민정당은 곧이어 내각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게 된다. 반면 신민당은 내분에 휩싸이게 되는데 양김을 중심으로 한 신민당의 주류세력이 확고한 직선제 개헌입장을 견지한 반면 비주류에서는 지속적으로 내각제 개헌론을 제기하고 급기야 1986년 12월 24일 '선민주화 후 내각제 협상'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이민우 구상'이 발표되기에 이른 것이다. 직선제 개헌투쟁을 선명히 전개하기 위해 양김을 비롯한 민주협계는 결국 4월 8일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4월 13일에는 발기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인천대회사건 이후 수세에 몰린 사회운동세력은 인천사건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에 따른 개헌에 대한 관점의 온건화라는 매우 중요한 성찰을 이루게 된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민통련, 학생운동의 NL계열

등 사회운동세력의 주류는 양김과 민주협이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운동세력의 온건화 전략의 채택으로 민국련사건과 5.3인천사건으로 소원해진 신민당과 사회운동세력 사이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6년 11월 29일 야당과 사회운동세력은 ‘영구집권음모 분쇄와 직선제 개헌’을 목표로 한 서울대회 개최를 시도한다.

그러나 1986년 말 신민당이 계획했던 서울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에 의해 무산된다. 당시 국회의 헌법특위는 계속 가동중이었고 여당은 ‘내각제’ 개헌안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민주적’ 개헌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으로부터의 위협은 없었다. 미국도 내각제를 지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직선제 개헌을 위해 원외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야당이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권력욕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 4) 2차 대중동원기: 1987년 4월~1987년 6월

새로운 대중동원기는 1987년 4.13 호헌조치 이후에 시작되었다. 1987년 4월 정권은 ‘내각제 개헌안’을 버리고 다시 ‘호헌론’으로 회귀했다. 1986년 4월 이래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개헌프레임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탈을 시도한 것이다. 그것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지기에 충분했고 사회전반적인 이반현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때의 대중동원은 신민당 탈당파가 제도정치 틀 안에 머물러 있었고 사회운동세력들이 참여자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가운데 교수,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신중간층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갖는다.

정치권과 사회운동세력은 5월 18일 박종철고문치사 조작폭로사건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직화를 시도한다. 5.3인천사건으로 소원해 있던 야권과 재야 사이를 민통련이 조율하면서 드디어 1987년 5월 27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가 결성된다. 국본의 결성으로 6.10민주항쟁은 사실상 ‘현실화’될 수 있었다.

#### 5) 소결

다음의 <표 5-1>은 이상에서 다룬 각 세력별 개헌에 대한 입장과 1980년대 개헌운동의 저항주기를 결합시켜 본 것이다. <표 5-1>의 첫번째 줄 정부의 입장과 마지막 줄의 ‘저항주기’를 비교해 보면 정부가 호헌론을 취했을 때 저항주기는 대중동원기로 진입하고 개헌론으로 이동했을 때 소강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프레임을 통한 ‘역압/위협’이 대중동원의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야당의 경우 정부가 강경한 호헌론을 제기할 때 직선제 개헌론으로 뭉쳐서 대중동원에 나서지만 정부가 개헌론으로 돌아선 소강기 동안에는 직선제와 내각제를 둘러싼 당내갈등을 겪는다. 정부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운동의 핵심적인 정치적 기회구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전체 개헌운동의 전개과정에는 정권측의 개헌프레임과 함께 원내제1야당의 행보 역시 중요하다. 야당은 소강기 동안에는 직선제 지지파와 내각제 지지파로 나뉘어 갈등하다가도 정부의 입장이 호헌론으로 바뀌고 위협이 심화되면 원외투쟁을 선포하고 대중동원에 적극 가담한다. 사회운동세력의 입장에서는 든든한 원군을 얻게 되는 것이다. 특히 1차대중동원기 동안 야당의 개헌서명운동, 헌판식집회 등은 대중동원을 위한 핵심적인 운동 레퍼토리가 되었다.

〈표 5-1〉 시기별 각 세력들의 개헌에 대한 입장과 저항주기

시기	1985.2	1985.2~1986.1	1986.2~4.30	1986.5~1987.4	1987.4.13~
정부	호헌론	호헌론 (대화가능)	강경호헌론	개헌론 →내각제	호헌론
야당	직선제 개헌론	주류: 직선제 비주류:내각제	직선제 개헌론	주류: 직선제 비주류:내각제	직선제 개헌론
사회운동세력 (주류)	×	제헌론, 정권퇴진론	제헌론, 삼민헌법론	직선제 개헌론	직선제 개헌론
일반시민	-	-	개헌론	-	개헌론
저항주기	12대총선	1차소강기	1차대중동원기	2차소강기	2차대중동원기

한편, 사회운동세력 역시 개헌운동의 저항주기 생성에 중요한데 사회운동세력의 입장이 급진화되어 야당과 분리되거나 조직화가 미진하여 자발적 대중들을 수렴해 내지 못할 때에는 정치적 기회구조가 아무리 유리하게 돌아가더라도 운동의 성공을 촉진하지 못한다. 정부, 여당의 입장이 호헌론이고 개헌에 대한 야당과 사회운동세력의 입장이 '직선제 개헌'으로 수렴되어 상호 대립적일 때 비로소 개헌운동은 성공에 이를 수 있었다. 6.10민주항쟁은 바로 이처럼 개헌프레임을 둘러싼 여러 정치, 사회세력들의 치밀한 전략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 가능했다.





제6장

6.10민주항쟁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



## 제6장

# 6.10민주항쟁을 둘러싼 세 가지 쟁점

6.10민주항쟁을 둘러싼 쟁점들 가운데 몇 가지는 6.10민주항쟁의 마스터 프레임이었던 개헌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좀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6.10민주항쟁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 가운데 세 가지를 다뤄보고자 한다.

우선 6.10민주항쟁의 지도부였던 국본을 둘러싼 쟁점이다. 정대화는 국본이 사회운동단체의 주도에 의해 결성된 단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세 가지 들고 있다(정대화 2005, 222-223). 첫째 국본의 결성은 재야를 비롯한 사회운동의 제의와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국본을 결성한 취지는 1985년 11월 민통련이 ‘민주헌법쟁취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문제의식을 계승했다는 점, 셋째 4.13 호헌조치 이후 각 지역에서는 호헌조치에 반대하는 지역조직들이 정당과 무관하게 결성되었으며 이들 조직은 국본 출범 후 지역본부로 재편성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정대화의 주장처럼 국본의 조직적 기원이 재야를 비롯한 사회운동조직들로부터 비롯되었음은 본 연구 역시 동의한다. 실제 국본은 1985년 민통련을 비롯하여 민청련과 개신교, 가톨릭운동단체 등 35개 단체에 의해 조직된 ‘학원안정법반대전국투쟁위원회’로부터 시작되어 같은 해 11월 민통련을 비롯한 사회운동조직과 민주협, 신민당이 포함되어 결성된 ‘고문 및 용공조작저지 공동대책위원회’, 1987년 1월 고문공대위의 연대투에 법조계, 학계까지 포괄하는 ‘추도준비위’ 등 범민주연대조직들을 모태로 하고 있다(박우섭 1987, 328-9). 이상의 연대조직들은 전국적 주요조직망을 확보하고 있었고 그것은 국본이 4-5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전국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존 연대조직들은 대체로 사회운동조직이 주도하고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조직’적 수준에서 사회운동의 주도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본 내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담당한 전국적인 ‘상징성’이라는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만일 6.10민주항쟁의 마스터 프레임이 ‘개헌’임을 인정하고 개헌프레임을 누가 가장 먼저 그리고 일관되게 제기했는가를 고려한다면 양김과 민주협을 중심으로 야당세력의 역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개헌프레임은 1985년 2.12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전신인 신민당의 선거공약으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운동세력은 ‘반민정당낙선운동’ 형태로 총선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개헌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다. 관심을 갖게 된 이후에도 초기에는 정권퇴진에 수반하는 것으로 사고하거나 좀더

급진적인 프레임으로 대체 등을 시도하고 있었다. 1986년 5.3인천대회 이후 민통련을 비롯한 사회운동 세력의 개헌에 대한 입장이 온건화되어 궁극적으로 ‘직선제 개헌’을 수용했지만 이 프레임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주창해온 세력은 역시 야당세력이며 일반대중들에게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1987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운동세력은 개헌문제보다 고문문제에 더 적극적이었다. 사회운동세력은 박종철사건이 벌어졌을 때 곧바로 추도준비위를 조직하고 2.7국민추도회나 3.3평화대행진과 같은 집회나 시위를 벌였다. 5월 박종철사건 은폐조작폭로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곧바로 이 사건과 관련한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반면 호헌조치가 취해졌을 때에는 성명서 발표, 농성 등은 이루어졌지만 한달이 넘게 범연대조직 결성 혹은 집회나 시위조차도 계획되지 않았다. 사회운동세력 대신 호헌조치 이후의 시국선언정국을 주도한 세력은 교수, 종교계, 약사, 의사, 예술인 등과 같은 신중간층을 중심으로 한 일반대중들이었다. 이들의 시국선언내용은 민주당의 직선제개헌에 대한 지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었든(종교계) 그보다 더 온건한 것이었든(교수 및 변호사, 의사, 약사 등) 대체로 민주당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점은 사회운동세력도 마찬가지였다.<sup>33</sup>

이처럼 국본이 개헌프레임의 주창자로서 야당의 상징적 리더십을 인정하는 형태로 꾸려졌기 때문에 6.10민주항쟁 전기간동안 야당이 개헌협상을 ‘독점’할 수 있었다. 야당은 1985년 2.12 총선 이래로 개헌문제를 가지고 원내에서 그리고 원외에서 싸워왔던 것처럼 6.10민주항쟁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했다. 국본의 사회운동부문은 여야대화를 주시하며 정부에 대한 압력의 완급을 조절해 나갔을 뿐 스스로 정치적 협상의 한 주체로 나서지 않았는데(윤상철 1997a, 134), 그것은 85년 이래로 지속되어 왔던 바로 그 패턴을 따른 것 뿐이다.

두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6.10민주항쟁은 어떤 계층이 주된 참여자였으며 어떤 계층이 주도한 항쟁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중간계급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는 반면(윤상철 1997; 정상호 2007), 노동자, 농민과 같은 민중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연구들도 있다(조현연 1997; 김원 2008). 본 연구는 6.10민주항쟁의 참여자는 전체계층이었다고 하더라도 주도계층은 중간층 특히 신중간층이었다고 본다. 6.10민주항쟁은 4월의 시국선언정국의 전국화와 집합행동화에 가까웠다. 4월의 시국선언정국을 주도했던 세력은 교수, 교사, 목사, 신부, 수녀, 스님, 변호사, 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 예술가, 기자 등 주로 신중간층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6월의 가두시위 역시 이들 신중간층과 학생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4월의 시국선언정국에 금융노동자 등 일부 노동자들의 참여가 있었고 이들은 6월에는 일명 ‘넥타

33 6.10민주항쟁 발생국면에서는 박종철사건과 호헌조치 두 가지 거대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두 사건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듯 6.10민주항쟁 발생에 유리한 기회들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가운데에서 6.10민주항쟁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역시 호헌조치였다. 5월 23일 박종철사건은 은폐조작폭로 관련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나 5월 27일 국본이 결성되면서 준비위원회가 개최하려고 준비했던 6.10대회는 국본이 주최하는 된 이후 “고문살인 조작 규탄 및 호헌절폐 국민대회”로 거듭나게 된다. 국본이 준비위원회를 포괄한 것이다. 더구나 박종철사건의 조작은폐가 폭로된 이후 결성된 국본의 명칭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된 것 역시 당시 두 사건 가운데 호헌조치의 영향력이 더 컸음을 시사한다. 박종철사건에 더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사회운동세력에게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문-인권프레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회운동조직들에게 특화된 프레임의 성격을 지닌다. 시민사회 일반의 경우 고문으로 인한 죽음에 분노를 공유할지언정 그 사건으로 행동에 나설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폭로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회운동조직들이 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하면서 국본을 결성하거나 직접적인 행위동원에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박종철사건의 중요성은 사회운동조직들을 결집시키고 행동으로 나서도록 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이부대'로 활약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6.10민주항쟁이 한 달 정도 지속되면서 기층민중들의 참여가 시작되었던 것은 사실이다.<sup>34</sup> 그렇다고 주도계층이 바뀐 것은 아니다. 노동계급은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6.10민주항쟁을 주도했다고 하기는 어렵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a, 242-251). 당시 민주노조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았다. 또한 7-8월 시작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작업장에서 '파업' 중심으로 벌어졌던 반면 6.10민주항쟁은 노동자 투쟁의 주된 레퍼토리인 '파업'은 거의 없었고 가두집회와 평화적 시위의 방식을 따랐다는 점에서도 양자간의 차이점은 분명해 보인다.

세 번째 앞서의 주도계층과 관련된 쟁점으로 6.10민주항쟁이 전개되면서 주된 목표의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민중주도를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특히 정권퇴진으로 목표가 변화될 조짐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반면 중간층주도를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시종일관 '민주헌법쟁취'라는 온건한 목표에 머물러 있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후자의 입장이다. 6.10민주항쟁 후반부로 가면서 생활상의 요구들이 슬로건으로 등장하고 정권퇴진프레임도 등장했지만(기사연 1987b, 78) 그것이 '호헌철폐'나 '직선제쟁취'와 같은 목표를 대체할 수준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6.10민주항쟁 기간동안의 지역별 투쟁상황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6.10민주항쟁을 기록하다』<sup>4권</sup>을 보면(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b), 서울을 포함한 지역의 6.10민주항쟁은 대체로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예정되었던 국민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에 의해 무산되고 이후 산발적인 가두시위가 전개된다. 이때 국본이 제시했던 구호 즉 '호헌철폐, 독재타도'가 외쳐졌으며 대체로 평화적 시위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저녁이 되면 퇴근길 시민들의 참여로 시위규모는 보다 더 증가하며 그 과정에서 간혹 폭력투쟁이 전개되기는 했으나 대체로 경찰의 강경진압에 맞선 방어적 성격을 띠었다. 시위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으나 평화롭게 해산하고 다음날 오후 다시 새로운 집회와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런 형식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간혹 지역별로 투쟁의 수위가 높아진 곳도 몇몇 군데 눈에 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는 수시로 시위대가 경찰력을 압도하면서 시위가 진행되었는데 6월 16일 5만명의 시위대가 충남도청에 다다랐을 때 도청을 점거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b, 291).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평화적 시위는 폭투로 돌변하였으며 6월 19일 시민이 경찰버스를 탈취하여 경찰저지선을 뚫다 경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급속도로 시위참여자 수가 줄어들었다(Ibid., 294).

여수에서는 6월 23일 이 지역 최대 규모인 3만군중이 운집한 시민궐기대회가 개최되었다. 3만군중들 사이에서는 시청과 경찰서를 점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주최측이 이를 만류하자 평화적인 대중집회형식으로 종결되었다(Ibid., 388). 목포에서는 6월 26일 화염병이 처음 등장했을 때 시민들은 박수를

34 <기사연리포트2>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18일 부평로에서 2만여명이 모여 대중집회를 가졌을 때 사회자가 학생에서 노동자로 바뀌었으며 토론도 노동자들이 중심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기사연 1987b, 89-91). 또한 부산지역의 경우 택시기사, 시내버스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보고가 있다. 동아일보(1987년 6월 15일자)에 따르면 "최근 시위에 관련된 구속자 명단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직업관이 다양하다. 이미 학생 일색은 아니다. 학원강사가 있는가 하면 외판사원도 눈에 띈다. 양재공이 있는가 하면 목수라는 글자도 보인다."라고 적고 있다. 상당수 노동자들의 참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치며 환호했고 ‘무장’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다음날 막상 학생 2백여명이 화염병 2개씩과 각목으로 무장하고 집결하자 시민들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Ibid., 381).

이상의 기록들은 당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때때로 도청, 시청 점거까지 시도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들은 면밀히 준비되었기보다 즉흥적이었다. 대체로 시위현장에서 지도부의 통제가 유지되고 있었고 대안지도부의 구성 혹은 대안지도부로의 리더십 이전과 같은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6.10민주항쟁의 대미를 장식하는 6월 26일 평화대행진까지도 여전히 화두는 ‘민주헌법쟁취’ 내지는 ‘직선제쟁취’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sup>35</sup>

1987년 6월의 전국적 대중동원의 결과 지배세력은 6.29선언의 형태로 호헌조치를 철회했고 직선제를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6.29선언이 발표되자 대부분의 요구조건을 약속받은 야당은 물론이고 국본의 경우에도 6.29선언을 환영했다.<sup>36</sup> 어떻게 보면 6월 내내 싸워서 얻은 것에 비해 ‘직선제쟁취’는 너무 소박한 성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후적 해석일 수밖에 없다. 국본이 처음 결성될 때 이 단체가 한달 만에 목표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애초부터 ‘직선제개헌’이 최대목표였던 민주당은 물론 사회운동단체의 경우도 1년 전의 5.3인천대회에서의 ‘교훈’때문에라도 민주당이 내건 목표 이상의 급진프레임을 내거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어쩌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본의 주도세력보다 더 급진세력이 주도하는 다른 형태의 조직 혹은 다른 형태의 리더십, 다른 형태의 프레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그와 같은 유의미한 움직임은 없었다.

국본은 이후 헌법개정요강발표, 양심수석방문제, 노동문제, 광주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나 크게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기는 어렵다. 국본의 활동 가운데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분야는 대통령선거 즈음해서 시작한 ‘공명선거운동’이었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7~9). 이것은 국본의 주요세력이 차후 시민운동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때 〈정권퇴진〉을 전제로 민주헌법쟁취를 주창했던 민통련은 6.29선언 이후 정권퇴진을 위해 보다 수위높은 운동을 전개하기보다는 ‘통일운동’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다.

35 6월 26일에 발표된 국본의 성명서(〈민주헌법쟁취 국민평화대행진에 즈음하여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1987년 6월 26일자)를 보면 “우리의 목적지인 민주헌법쟁취와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수립을 향한 우리의 방법인 국민평화대행진에 우리 모두 힘찬 발걸음을 모읍시다.”라고 기존의 목표를 좀더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28-29).

36 〈성명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1987.6.29.(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30).



제7장

결론





1987년 6.10민주항쟁이 발생한지도 벌써 30여년이 되었다. 갓난아이가 자라서 30세의 성인이 될 정도의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6.10민주항쟁은 여전히 현재적이다. 여전히 현재를 규정하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6.10민주항쟁을 지속적으로 불러내고 탐구하고 재해석해야 한다.

6.10민주항쟁은 한국의 현재적 민주주의의 기원이 되는 대사건인 만큼 상당한 분량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그럼에도 사회운동으로서 6.10민주항쟁의 핵심 슬로건인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이 바로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본 연구는 사회운동론 특히 개헌프레임에 주목하여 6.10민주항쟁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도 기존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6.10민주항쟁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개헌프레임을 6.10민주항쟁의 마스터 프레임이었다고 전제하고 개헌프레임의 등장부터 6.10민주항쟁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주목해 보았다. 1985년 2.12 총선에서 처음 등장한 직선제 개헌프레임은 그것을 제기했던 신생 야당 신민당을 일약 제1야당으로 급부상시킨다. 이후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세력 역시 개헌프레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개헌 프레임은 단순한 선거공약으로 남지 않고 이후 ‘개헌’운동을 생성시킴으로써 6.10민주항쟁에 이르는 저항주기의 마스터 프레임으로 기여한다.

사실 개헌프레임이 야당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당시의 사회운동세력들은 이 프레임의 중요성은 인정하되 그것을 지나치게 온건한 것으로 보고 보다 급진적인 프레임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일반대중으로부터 소외만 자초한 1986년 5월 3일 인천대회에서의 패배를 전환점으로 사회운동세력 내에서는 개헌 프레임을 받아들이는 온건화 움직임이 대세로 자리잡게 된다. 그 결실이 바로 야당과 사회운동세력이 협력하여 결성한 6.10민주항쟁의 지도부 국본이다.

이처럼 개헌프레임에 주목함으로써 본 연구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반독재민주화운동의 한 주체로서 야당의 중요성과 이중적 역할이다. 사실 그동안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야당의 역할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당은 제도권 정당으로서 정치사회의 행위자로서만 다뤄지거나(임혁백 1990; 이계희 1992; 심지연 2006) 사회운동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6.10민주항쟁 기간 내내 저항의 급진화를 염려하는 ‘기회주의자’ 내지는 6.29선언 이후 본격화된 개헌국면에서 개헌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간 협상세력으로 주로 다뤄졌다(조현연 1997; 김대영 2006; 김원 2008). 물론 야당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동시에 야당은 민주화운동의 한 주체였다. 야당은 6.10민주항쟁의 마스터 프레임인 개헌프레임을 처음으로 제기했으며 그것을 끝까지 일관되게 주창한 세력이기도 하다. ‘개헌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야당은 제도권내의 동맹세력인 동시에 때때로 국회밖으로 나와 개헌운동에 가담하는 운동주체세력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담당했다.

둘째, 개헌프레임이 자체적인 대규모 대중동원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개헌은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정부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하자는 것으로 시민사회의 여론주도세력인 신중간계층의 온건한 개혁주의와 잘 조응했다. 1985년 2.12 총선에서 신생 신민당은 ‘개헌’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의 결과로 제1원내야당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개헌프레임은 1986년 개헌 현판식집회, 종교계, 교수들의 시국선언, 1987년 4.13 호헌조치 이후의 각계각층에 의한 시국선언정국 등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체적 대중동원력을 보여주었다. 이 프레임의 대중동원력은 야당 혹은 사회운동세력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6.10민주항쟁 역시 이러한 개헌프레임의 높은 대중동원력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 개헌 프레임이 야당에 의해 제기되기는 했으나 대중 그 스스로에 의해 ‘선택’된 프레임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당시 일반대중들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 정도를 염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민주화이행이 엘리트간의 협약에 의해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으로(만) 진행됐던 것은 사실 일반대중의 지지속에서 그렇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운동조직들의 조직가(organizer)로서의 역할이다. 사실 6.10민주항쟁의 마스터 프레임인 개헌프레임을 야당이 제기했고 개헌프레임 그 자체가 6.10민주항쟁에서 대중동원의 상당부분을 책임졌다면 6.10민주항쟁에서 사회운동세력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운동세력은 여전히 6.10민주항쟁 발생에 필수적인 요소였는데 이들의 역할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던 저항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해내는 조직가로서 역할이었다. 이들이 부재하거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거대한 대중동원이 발생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러하다.

1986년에도 개헌프레임을 중심으로 거대한 대중동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운동조직들은 개헌프레임을 마스터 프레임으로 수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헌’이나 ‘정권퇴진’과 같은 급진프레임을 중심으로 제기했다. 그 결과 1986년 5.3 인천대회가 보여주듯 사회운동조직의 고립과 함께 전체 개헌운동도 약화되었다. 또한 1987년 4.13 호헌조치 이후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발표되고 단식행렬이 이어졌으나 그것이 ‘4월항쟁’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역시 사회운동조직의 결집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6.10민주항쟁은 사회운동조직이 온건화되면서 개헌 프레임을 수용하고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함으로써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시국선언정국을 하나로 수렴해 내어 전국적인 집합행동으로 결집시켜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회운동세력이 6.10민주항쟁 발생을 위해 모든 것을 했다거나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대신에 제한된 역할이나마 필수적인 역할을 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6.10민주항쟁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운동 프레임으로서 개헌프레임을 조망할 때 6.10민주항쟁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과 그 위상에 대해 보다 더 입체적이며 상대적인 이해가 가능해 진다.

## 참고문헌

-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6월항쟁을 기록하다』2~4권.
- 강신철 외. 1988.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 강원택. 2015. “‘87년 체제’와 민주화추진협의회.”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추진협의회』. 오름. 15-48.
- 국회사무처. 2008. 『의정자료집』.
- 김대중. 2015. 『김대중자서전』1권. 삼인.
- 김동춘. 1997. “19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성장과 그 성격.”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10년』.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자료집. 당대. 65-103.
- 김성익 편. 1992. 『전두환 육성증언』. 조선일보사.
- 김영삼. 2015. 『김영삼회고록: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2권. 백산서당.
- 김용철. 2015.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화.” 『민주주의와 인권』15(3). 275-320.
- 김인. 1983.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11대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1. 73-94.
- 김정남. 2007.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1987년 1월에서 6월까지』. 오름.
- 김호기. 1994. “권위주의 정권의 해체와 민주주의로의 이행, 1987-1992.”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한국사회의 변동: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한울. 26-59.
- 류청하. 1992. “1985년 2.12총선: 위협당한 5공군부독재.” 『역사비평』 2. 68-74.
-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 『민통련: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평가서(I) 자료편』.
- 민족민주운동연구소. 1989a. 『국민운동본부: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평가서(1) 자료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2: 유신체제기』. 돌베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0a. 『한국민주화운동사3: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돌베개.
- 민주화추진협의회. 1988. 『민주새비』.
- 박명림. 2005. “87년 현정체제 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창작과비평』 33(4). 34-51.
- 박선웅. 1998. “문화, 의례와 정치변동: 한국의 민주적 전환.” 『한국사회학』제32집 봄호. pp. 29-61.
- 박선웅. 2007. “의례와 사회운동: 6월항쟁의 연행, 집합열광과 연대.” 『한국사회학』제41집 봄호. pp. 26-56.
- 박우섭. 1987. “민주변혁과 연합전선예의 모색.” 『전환: 6월투쟁과 민주화의 진로』. 사계절. 315-338.

## 참고문헌

- 백종국. 1992. “민중연합, 민주연합과 한국의 민주화: 계급연합과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회비평》7. 253-289.
- 사회문화연구소. 1993. 『사회운동론』. 사회문화연구소.
- 손호철. 2003. “한국 민주화: 이론적 쟁점.” 『현대 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 사회평론. 375-400.
- 서관모. 1987. “중간계층의 계급적 성격.” 《실천문학》8. 108-123.
- 성경룡. 1995. “한국 정치민주화의 사회적 기원-사회운동론적 접근.” 임현진·송호근 공편. 『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한국의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사회비평사. pp. 233-278.
- 서경석. 2009. “민주주의와 헌법개정.” 《법학연구》12(3). 1-35.
- 서중석. 2011. 『6월항쟁』. 들베개.
- 서희경. 2014. “한국 헌정사와 개헌: ‘대통령의 임기’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35(2). 73-102.
- 성낙인. 2013. “헌법개정과 권력구조(정치제도).” 《저스티스》제134-2호. 134-149.
- 심지연. 2002. “박정희정부하의 정당구도 분석: 1972~1979.” 《한국정당학회보》1(1). 177-205.
- 심지연. 2006. 『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백산서당.
- 유은정. 1993. “한국의 민주화 이행초기단계(1985-1987)에 있어서 제10야당의 역할과 한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상철. 1997.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이행과정』.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상철. 1997a. “6월민주항쟁의 전개과정.”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당대. 107-143.
- 윤성이. 1999.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 권위주의체제 변동: 정치기획구조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32(4). 111-128.
- 이갑윤. 1985. “제5공화국 국회의원선거의 분석과 전망.” 《한국정치학회보》9. 47-58.
- 이갑윤·문용직. 1995. “한국의 민주화: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정치학회보》29(2). 217-232.
- 이계희. 1992. “민주화운동과 야당정치: 1980년대 한국의 사례.” 《사회과학연구》(총남대) 3. 285-341.
- 이명식. 2005. “민통련 운동의 전개과정과 평가.” 《기억과전망》12. 20-36.
- 이용마. 2015. “야당 정치와 민주화추진협의회.”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추진협의회』. 오름. 51-87.
- 이재영. 1992. “헌법개정 백만인 청원운동과 장준하.” 《월간 말》1월호. 196-203.
- 이준한. 2014. “인천의 5.3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 제28주년 인천 5.3민주항쟁 기념토론회 발표문. 1-28.

## 참고문헌

- 임혁백. 1990.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 분석-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pp. 51-77.
- 임현진. 1987. “참여보다 안보에 치중.” 《월간조선》4월호. 364-369.
- 정대화. 2005. “민주화 과정에서 민통련과 국민운동본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역사구조적 관점에서 주체 형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제8호. pp. 213-240.
- 정상호. 2007. “시민(citizen)과 시민권(citizenship)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아세아연구》50(4). 163-190.
- 정일준. 2010.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한미관계: 광주항쟁에서 6월항쟁을 거쳐 6공화국 등장까지.” 《역사비평》2. 296-332.
- 정일준. 2011. “학원안정법파동 연구: 한국 민주화 이행에서 통치와 정치 그리고 사회운동.” 《사회와역사》91. 255-292.
- 정철희. 1995. “한국 민주화 운동의 사회적 기원: 미시동원맥락과 프레임의 형성.” 《한국사회학》 가을호. 501-532.
- 정철희. 1996. “중위동원과 6월항쟁: 사회운동조직의 구조적·문화적 통합.” 『한국사회학』 제30집(봄호). 65-91.
- 정해구·김혜진·정상호. 2004.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제정구. 1985. “수치로 분석한 12대 총선.” 《실천문학》4. 358-369.
-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출판.
- 조대엽. 2005. “19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과 민주화운동의 급진적 확산: 반미주의의 분화와 대중화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21(4). 189-215.
- 조성대. 2015. “민주화추진협의회와 정치 이념.”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추진협의회』. 오름. 91-132.
- 조현연. 1997. “6월민주항쟁의 이념·주체·전략.”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10년』.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자료집. 당대. 145-182.
- 진덕규. 1987. “중산층의 보수화가 문제.” 《월간조선》 2월호. 114-119.
- 최재현. 1987. “한국의 중산층, 왜 비겁한가.” 《월간조선》4월호. 354-363.
- 최현·김지영. 2007. “구조, 의미틀과 정치적 기회: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경제와 사회》 가을호. 251-281.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86. 『개헌과 민주화운동』. 민중사.
- 한상진. 1987. “한국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중산층의 규모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21. 여름호. 121-148.

## 참고문헌

- 임혁백. 1990. “한국에서의 민주화과정 분석-전략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pp. 51-77.
- 임현진. 1987. “참여보다 안보에 치중.” 《월간조선》4월호. 364-369.
- 정대화. 2005. “민주화 과정에서 민통련과 국민운동본부의 역할에 대한 평가: 역사구조적 관점에서 주체 형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제8호. pp. 213-240.
- 정상호. 2007. “시민(citizen)과 시민권(citizenship)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아세아연구》50(4). 163-190.
- 정일준. 2010.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한미관계: 광주항쟁에서 6월항쟁을 거쳐 6공화국 등장까지.” 《역사비평》2. 296-332.
- 정일준. 2011. “학원안정법파동 연구: 한국 민주화 이행에서 통치와 정치 그리고 사회운동.” 《사회와역사》91. 255-292.
- 정철희. 1995. “한국 민주화 운동의 사회적 기원: 미시동원맥락과 프레임의 형성.” 《한국사회학》 가을호. 501-532.
- 정철희. 1996. “중위동원과 6월항쟁: 사회운동조직의 구조적·문화적 통합.” 『한국사회학』 제30집(봄호). 65-91.
- 정해구·김혜진·정상호. 2004. 『6월항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제정규. 1985. “수치로 분석한 12대 총선.” 《실천문학》4. 358-369.
- 조대엽. 1999. 『한국의 시민운동-저항과 참여의 동학』. 나남출판.
- 조대엽. 2005. “1980년대 학생운동의 이념과 민주화운동의 급진적 확산: 반미주의의 분화와 대중화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21(4). 189-215.
- 조성대. 2015. “민주화추진협의회와 정치 이념.”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화추진협의회』. 오름. 91-132.
- 조현연. 1997. “6월민주항쟁의 이념·주체·전략.”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10년』. 6월민주항쟁 10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자료집. 당대. 145-182.
- 진덕규. 1987. “중산층의 보수화가 문제.” 《월간조선》 2월호. 114-119.
- 최재현. 1987. “한국의 중산층, 왜 비겁한가.” 《월간조선》4월호. 354-363.
- 최현·김지영. 2007. “구조, 의미틀과 정치적 기회: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경제와 사회》 가을호. 251-281.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86. 『개헌과 민주화운동』. 민중사.
- 한상진. 1987. “한국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중산층의 규모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21. 여름호. 121-148.

## 참고문헌

- 한상진. 1987. “한국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중산층의 규모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21. 여름호. 121-148.
- 한완상. 1987. “여론을 바로보는 정치: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정치의식의 변화.” 《월간조선》2월호. 104-113.
- 홍성태. 2016. “한국의 저항주기 궤적과 역사적 사회운동의 형성.” 『기억과전망』34호. 239-284.
- 홍일표. 2006.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입법운동의 구조와 동학, 1988년-2005년.”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황인성. 1997. “투쟁의 구심,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역사비평』. 20-63.
- Carroll, William K. and R.S. Ratner. 1996. “Master Framing and Cross-Movement Networking in Contemporary Social Movement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7(4). 601-625.
- Cohen, Jean L. and Andrew Arato. 1992.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The MIT Press.
- Diani, Mario. 1996. “Linking Mobilization Frames and Political Opportunities: Insights from Regional Populism in Ital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6). 1053-1069.
- Eisinger, Peter K. 1973. “The Conditions of Protest Behavior in American Cit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1). pp. 11-28.
- Gerhards, Jürgen and Dieter Rucht. 1992. “Mesomobilization: Organizing and Framing in Two Protest Campaigns in West Germa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3). 555-596.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the Experience*. Harper Colophon.
- Goldstone, Jack A. and Charles Tilly. 2001. “Threat (and Opportunity): Popular Action and State Response in the Dynamics of Contentious Action.” in *Silence and Voice in the Study of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79-194.
- Goodwin, Jeff and James M. Jasper. 2004. “Caught in a Winding, Snarling Vine: The Structural Bias of Political Process Theory.” in Jeff Goodwin and James M. Jasper eds. *Rethinking Social Movements: Structure, Meaning, and Emotion*.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Inc. pp. 3-30.
- Kitschelt, Herbert P. 1986.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and Political Protest: Anti-Nuclear Movements in Four Democrac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1). pp. 57-85.
- Kriesi, Hanspeter. 1995[1991]. “The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of New Social Movements: Its Impact on Their Mobilization.” in J. Craig Jenkins and Bert Klandermans eds. *The Politics of Social Protest*. pp. 167-198.

## 참고문헌

- Koopmans, Ruud. 2004.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Some Splittling to Balance the Lumping." in Jeff Goodwin and James M. Jasper eds. *Rethinking Social Movements: Structure, Meaning, and Emotion*.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Inc. pp. 61-73.
- McAdam, Doug. 1982.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the Black Insurgency 1930-1970*.
- McAdam, Doug. 1988. "Micromobilization Contexts and Recruitment to Activism." in Bert Klandermans, Hanspeter Kriesi and Sidney Tarrow eds.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vol. 1*. JAI Press Inc. pp. 125-154.
- McAdam, Doug and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1996. "Introduction: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framing processes-Toward a synthetic, comparative perspective on social movements." in Doug McAdam, John McCarthy and Mayer Zald eds. *Comparative Perspectives on Social Movements-Political opportunities, mobilizing structures, and cultural fram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0.
- McCarthy, John D. and Mayer N. Zald. 1987[1977].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A Partial Theory." in John D. McCarthy and Mayer N. Zald eds. *Social Movements in an Organizational Society*. Transaction Publishers. pp. 15-42.
- Meyer, David S. and Debra C. Minkoff. 2004. "Conceptualizing Political Opportunity." *Social Forces* 82(4). pp. 1457-1492.
- Mooney, Patrick H. and Scott A. Hunt. 1996. "A Repertoire of Interpretations: Master Frames and Ideological Continuity in U.S. Agrarian Mobilization." *The Sociological Quarterly*. 37(1). 177-197.
- Snow, David A., E. Burke Rochford, Jr., Steven K. Worden and Robert D. Benford. 1986. "Frame Alignment Processes, Micromobilization, and Movement Particip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1(4). 464-481.
- Snow, David A. and Robert D. Benford. 1992.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in Aldon D. Morris and Carol M.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Yale University press. 133-155.
- Stanbridge, Karen. 2002. "Master Frames, Political Opportunities, and Self-Determination: The Åland Islands in the Post-WWI Period." *The Sociological Quarterly*. 43(4). 527-552.
- Tarrow, Sidney. 1994. *Power in Movement-Social movements, collective action an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Verta. 1989. "Social Movement Continuity: The Women's Movement in Abeya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5). 761-775.



# 1980년대 개헌운동과 6.10민주항쟁

---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6층  
**연락처** 전화번호 02-3709-7618  
홈페이지 <http://ikd.kdemo.or.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표지원안 (주)크리에이티브 다다  
**ISBN** ISBN 979-11-87593-39-3 (03300)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A동 6층

전화: 02)3709-7618 팩스: 02)3709-7520

